

DJDI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현황 및 효과 분석

주혜진 · 류유선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현황 및 효과 분석

주 혜 진 · 류 유 선

연구진

연구책임 •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 류유선 /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요약 및 정책제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전지역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추진 방향을 제기한 연구(주혜진 외, 2011)가 있었고,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과 대전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를 점검한 연구(구미현 외, 2015)는 있었으나,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점검과 보완 내용 제시는 없었다고 평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지역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지역 추진 사업들인 시행계획의 내용과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17년 시행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의 세부사업과 예산, 실적 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시행계획의 주요 부문-경제활동, 복지, 돌봄, 성평등문화 확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과 대면 조사를 실시해, 여성정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2015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역 여성정책을 점검할 기회이며,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기회다. 이 연구를 통해 정책 환경 및 사회 환경 변화,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나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수립을 기대한다.

■ 시행계획 세부사업 예산 특성

-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일자리
 - ‘여성농업인 경역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7백 만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며, ‘여성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이 229억 9천4백 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성폭력 예방 사업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중 비예산 사업인 '불법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단속 강화' 사업부터, 10억 3천 만원이 투입된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사업까지 모두 9개가 2015년에 추진됐다.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취약계층 복지 사업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 가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154억 4천 8백 만원이 투입된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이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돌봄과 건강 사업

- 가장 많은 예산인 2,362억 1백 만원이 투입된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업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하기 위한 사업에도 47억 7천 4백 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 가장 많은 예산인 2억 1천 만원이 투입된 사업은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사업이며, 총 10개의 사업 중 5개가 비예산 사업이다.

■ 정책과제 추진 성과 분석 시사점

- 다양한 실과에서 다양한 영역과 주제의 양성평등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획조정실의 주요 사업들이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중 '가족관계 만족도' 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돌봄 예산이 증액된 데 반해, 확장, 강화되지 못했다.
- 최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내용과 예산 면에서 확장, 증가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한 세대별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

- 일자리와 안전 등 두 영역에 있어서는 사업 방향과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이 요구된다.
- 일회성 사업, 홍보용 사업 등은 정리하고, 성인지적 사업 계획 수립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집 운영 관련한 예산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증액되고 확대되었으나, 지자체적으로 운영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하다.
- 성 주류화 제도 관련한 교육과 사업이 확장되고 종류도 많아졌으나, 사업 추진의 전문화를 위한 예산 투입과 성 주류화 제도 간 연계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 2017년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목표

비전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목표	성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화	차이와 인권 존중
정책 과제	대과제 (7개)	중과제 (12개)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2. 일·가정 양립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돌봄의 다양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3. 고용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4. 공공·국제분야 여성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 폭력근절과 인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 안전한 사회문화환경 조성 	
	6. 건강과 복지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7.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연계 강화 	

■ 2016년 양성평등정책 수정·보완 필요 사업

중과제	사업명	수정·보완 내용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 실적 점검 대상 기관의 확대 - 시·구청에서 출연·출자기관, 공공부문에 속하는 기관(시설)까지 확대 점검하여 실적 점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 일회성 사업이므로 삭제 - 출연·출자기관, 공공부문에 속하는 기관(시설)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추진 현황 점검으로 수정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사업 추진의 실효성 재검토 필요 -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으로의 편입 검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강화	- 실적 점검 대상 기관의 확대 - 다양한 기관 및 대상에 따른 교육 추진 실적 점검 필요
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안전망 강화	- 여성안전을 위한 거버넌스 정기적 운영 필요 -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 2017년 시행계획의 주요 신규 세부과제 제안

대과제	중과제	사업명	사업 내용
양성평등 문화 확산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시민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교육	- 성평등 교육 전문가 인력뱅크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용 격차 해소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발굴과 지원 강화	- 기존 사업의 확대와 강화(예산 증액)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강화	- 동, 중, 대덕구에 부족한 여성새일센터 확충 방안 제시 필요 - 지소 설치 등 인력 보강에 따른 취약 지역 지원 강화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안전한 사회문화 환경조성	안전문화운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한 포럼의 정례화 -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와의 연계 추진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 인력의 전문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에 대한 보상, 교육훈련 강화, 업무 분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연계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이행점검과 환류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및 결과 공유, 홍보

- 목 차 -

제1장 연구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와 내용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6
1. 연구 방법	6
2. 기대 효과	6
제2장 지역 현황 및 양성평등정책 환경의 변화	9
제1절 대전지역 여성 현황과 변화 전망	9
1.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의 변화	9
2.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 악화	11
3. 여성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15
4. 시민 성평등 의식 제고	18
제2절 양성평등정책 환경의 변화	19
1.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흐름	19
2. 양성평등기본법과 대전시 양성평등기본조례	27
제3장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 분석	33
제1절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흐름과 변화	33
1. 2013~2016년 정책과제 흐름과 변화	33
1) 조례 내용에 따른 정책과제 분석	33
2) 추진 성과별 정책과제 분석	37

3) 성평등 지수 지표별 정책과제 분석	39
2. 2013~2016년 예산 흐름과 변화	47
제2절 2013~2015년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56
1. 시행계획 과제별 평가 점검 지표	56
2.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	62
제3절 정책과제 추진 성과 분석 시사점	96
제4장 2017년 대전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제안	101
제1절 2017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	101
제2절 2017년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목표	104
제3절 2017년 시행계획 세부과제 수정 및 보완 제안	106
참 고 문 헌	111
부 록	115

- 표 목 차 -

<표 2-1> 성별과 직업	13
<표 2-2>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의견	14
<표 2-3>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 안전 인식 비율	18
<표 2-4>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19
<표 2-5>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1
<표 2-6>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2
<표 2-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4
<표 2-8>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6
<표 3-1> 양성평등기본조례 내용에 따른 정책과제 분류(2016년)	33
<표 3-2>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 정책과제 분류 -성 주류화 제도(2013~2015년)	36
<표 3-3> 여성정책 추진 실적 및 추진 정책 수(2013~2015년)	38
<표 3-4> 대전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2014년 기준)	39
<표 3-5> 성평등지수-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과제와 예산	41
<표 3-6> 성평등지수-여성의 인권과 복지 영역 과제와 예산	43
<표 3-7> 성평등지수-성평등 의식과 문화 영역 과제와 예산	44
<표 3-8> 정책과제 예산 현황-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47
<표 3-9> 정책과제 예산 현황-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49
<표 3-10> 정책과제 예산 현황-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51
<표 3-11> 정책과제 예산 현황-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2
<표 3-12> 정책과제 예산 현황-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54
<표 3-13> 정책과제 예산 현황-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54
<표 3-14> 정책과제 예산 현황-특화사업	56
<표 3-15>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점검지표	57

<표 3-16>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이행점검 틀	57
<표 3-17> 여성정책 영역별 현장 전문가 조사 과정과 참여자 특성	59
<표 3-18> 현장 전문가 대상 정책 사업 점검 양식의 예	60
<표 3-19> 대전시 2015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적 점검표(안)	61
<표 3-20>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63
<표 3-21>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성폭력 예방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71
<표 3-22>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취약계층 복지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76
<표 3-23>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돌봄과 건강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82
<표 3-24> 성평등 의식·문화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91
<표 4-1> 2016년 양성평등정책 수정·보완 필요 사업	106
<표 4-2> 2017년 시행계획의 주요 신규 세부과제 제안	107
<표 4-3> 2017년 시행계획 과제 총괄표 변경안	108

- 그림 목 차 -

[그림 2-1] 고령화	9
[그림 2-2] 1인 가구의 증가	10
[그림 2-3] 여성 가구주 가구의 증가	11
[그림 2-4]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추이	12
[그림 2-5] 가사노동시간	15
[그림 2-6] 강간·강제추행 발생 및 검거 수	16
[그림 2-7] 가정폭력 검거 및 재범률	17

제 1 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는 1998년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3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왔다. 2015년 까지 시행해 오던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으로 변경되어 새롭게 수립되었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당초 2013~2017년까지의 추진 일정이었으나,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근거법에 맞춰 이름과 내용을 수정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대전광역시도 매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현황과 시민 수요를 감안해 수립해 왔다. 2001년 12월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6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조항에 근거해 수립해 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 계획은 2015년 12월 시행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이전까지 매년 수립돼왔다.

여성정책기본계획(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이 처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시하는 상징이면서, 여성의 삶을 둘러싼 많은 사회적 여건(일, 가족 형성, 건강, 돌봄 등)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민무숙 외, 2011). 중앙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워 여성정책 추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면, 지방자치 단체는 그 기본틀에 지역 사정에 맞는 시행계획들을 엮어왔다. 하지만,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성과에 대한 점검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전년도 추진실적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이행점검을 대신했다.

대전지역에서는 2011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개소하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새

로운 추진 방향을 제기한 연구(주혜진 외, 2011)가 있었고,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과 대전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를 점검한 연구(구미현 외, 2015)는 있었으나,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보완 내용 제시는 없었다고 평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실질적 지역 추진 사업들인 시행계획의 내용과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자 한다. 우선, 대전지역 여성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최근 지역 여성의 삶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여성의 삶의 변화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고, 이 변화에 근거해 추진 실적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3년 간 수립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변화 흐름과 시행계획의 내용 흐름을 여러 기준으로 분류해 보고 그 특징과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고자 한다. 매년 똑같은 사업들이 시행계획에 있을 수 있고, 혹은 정책 패러다임과 이슈에 따라 새로운 사업이 이전 사업을 대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행계획 사업의 변화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시행계획 사업의 타당성과 현실 적합성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지역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추진실적은 당초 목표한 만큼을 달성했는가 그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지만, 그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성과 정도도 매우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앞으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정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은 2017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대전시 시행계획의 수립 방향과 세부과제 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역 여성의 현황 변화, 기존 시행계획 사업들의 내용과 추진 실적 점검,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17년 시행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내용

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를 갖는다.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사업 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 2013년 ~ 2016년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사업 추진 실적 분석을 위한 시간적 범위: 2015년
-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안) 목표연도: 2017년

2.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제2장에서는 지역 여성의 현황 및 양성평등정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한 통계 지표 상 결과와 <지역 성평등 지수>결과, 그리고 조례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수립된 대전시 시행계획의 흐름과 특성을 여러 기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시행 계획의 실적을 현장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제4장에서 2017년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계획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조사 방법을 활용한다. 우선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및 실적 등 행정자료를 분석했다.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의 세부사업과 예산, 실적 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시행계획의 주요 부문-경제활동, 복지, 돌봄, 성평등문화 확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과 대면 조사를 실시해, 해당 영역에서의 여성정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 기대 효과

이 연구는 여성정책 환경의 변화와 지역 여성의 삶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최근 추진해 온 여성정책(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2017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2015년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역 여성정책을 점검할 기회이며,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기회다. 이 연구를 통해 정책 환경 및 사회 환경 변화,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나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수립을 기대한다.

제 2 장

지역 현황 및 양성평등정책 환경의 변화

제1절 대전지역 여성 현황과 변화 전망

제2절 양성평등정책 환경의 변화

제2장 지역 현황 및 양성평등정책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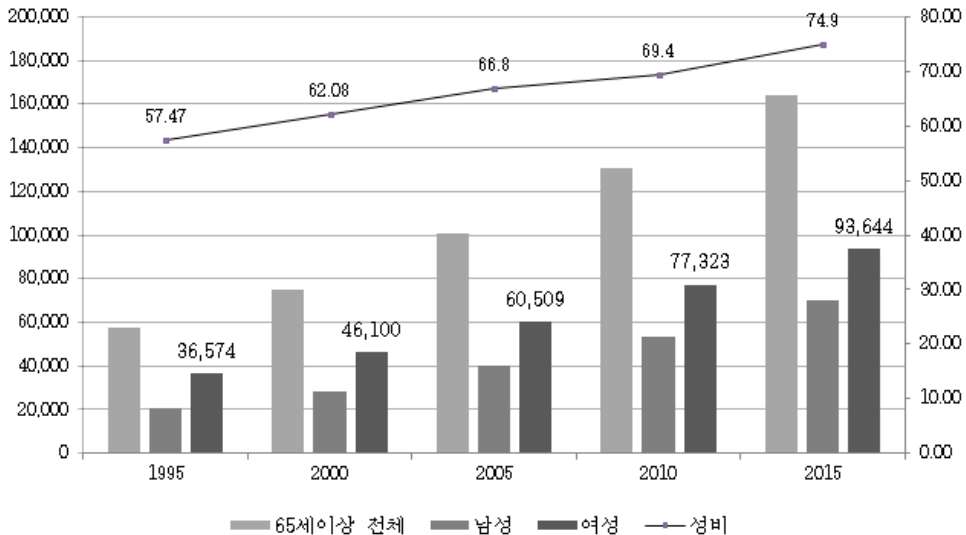
제1절 대전지역 여성 현황과 변화 전망

1.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의 변화

대전지역 총인구는 2015년 현재 151만 9,314명에 이르며, 여성은 75만 6,004명으로 남성보다 다소 적다. 대전지역도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 조사 시기가 거듭될수록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

[그림 2-1] 고령화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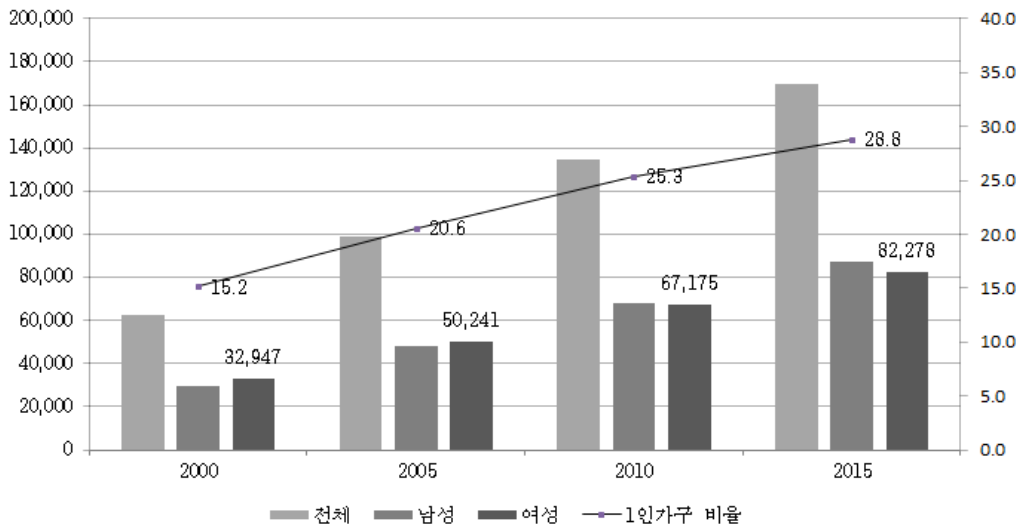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최근 인구총조사 결과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1인 가구의 증가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5년에 한번 실시되는 인구총조사 때마다 1인 가구의 비율이 약 5%씩 늘고 있다.

[그림 2-2] 1인 가구의 증가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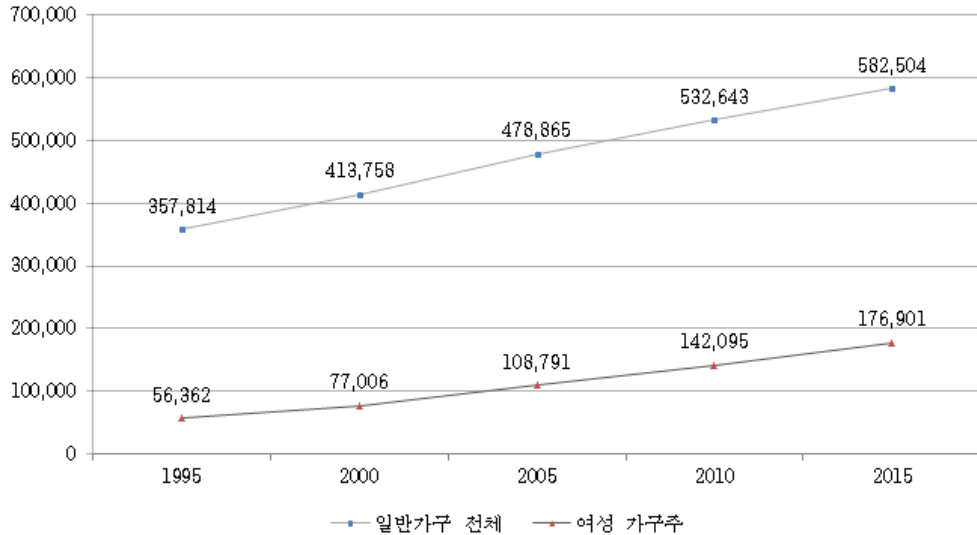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1인 가구의 비율이 2015년 조사에서 전체 대전시 가구의 28.8%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가구의 1/3수준을 보인다. 증가 추세에 있는 1인 가구는, 대전시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다.

1인 가구만큼은 아니어도 여성 가구주 가구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2-3] 여성 가구주 가구의 증가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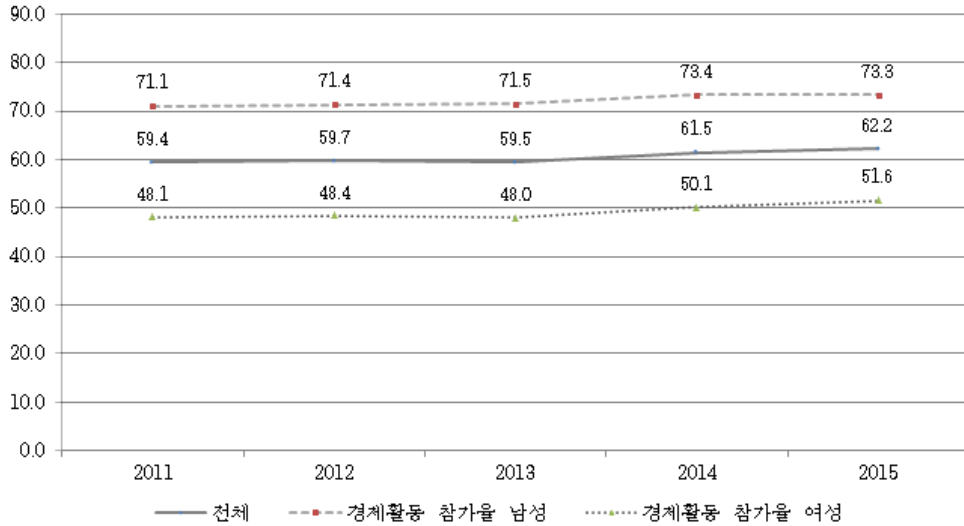
대전지역 여성 가구주 가구는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14만여 가구였으나, 2015년 17만 6천여 가구로 증가했다. 전체 58만여 가구 중 약 30%가 여성 가구주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 약화

대전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상 51.6%로 2011년 수치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 아니다.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도 대전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에 근거한 성평등 지수는 10위 권 밖이었다. 남성과의 격차를 살펴보면 대전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림 2-4]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직업과 성별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직업의 종류에 따라 성별 특성이 여전히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직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 차이가 3배 이상이다. 연구기관 및 대학이 인구에 비해 많은 대전지역의 특성이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 비율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서비스 및 판매는 여성 비율이 높고, 기능직 비율이 남성이 높은 특성은 타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2-1> 성별과 직업

(단위 : %)

구분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군인	기타	
2013	전체	100.0	2.9	7.1	28.4	23.3	15.8	0.9	9.9	3.1	7.7	0.4	0.5
	남성	100.0	4.1	7.8	30.7	17.4	11.5	1.1	13.4	4.3	8.5	0.6	0.6
	여성	100.0	0.7	6.0	24.6	33.4	23.0	0.5	3.9	1.0	6.4	0.0	0.5
2014	전체	100.0	5.9	19.2	19.5	22.8	9.6	1.0	6.6	4.2	8.8	0.6	1.8
	남성	100.0	8.0	19.4	20.1	16.4	7.7	1.1	9.3	6.2	8.7	0.9	2.2
	여성	100.0	2.8	19.0	18.7	32.3	12.3	0.7	2.5	1.1	8.9	0.0	1.7
2015	전체	100.0	2.6	7.1	38.8	20.2	14.9	0.6	5.9	3.3	6.2	0.3	0.1
	남성	100.0	4.1	8.8	40.7	11.9	12.1	0.7	9.2	5.4	6.5	0.5	0.1
	여성	100.0	0.5	4.7	36.1	31.5	18.7	0.5	1.4	0.5	5.9	0.1	0.1

주 : 원자료에 표시되지 않은 기타 항목 표시
 자료 : 대전광역시, 「사회지표」(각 연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하는 여성의 ‘일과 가정 간 균형’이라 할 수 있다. 대전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일과 가정이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지만,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여성은 일과 가정을 둘 다 중요시 여기는 데 비해 남성은 일을 중요시 여기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계	주로 일을 우선시 한다	대체로 일을 우선시 한다	둘 다 비슷하다	대체로 가정을 우선시 한다	주로 가정생활을 우선시 한다	
2011	계	100.0	29.8	27.6	31.8	8.5	2.2
	남	100.0	34.5	30.8	26.4	6.7	1.6
	여	100.0	22.5	22.7	40.3	11.2	3.3
2013	계	100.0	28.9	30.5	30.2	7.6	2.7
	남	100.0	34.1	35.4	22.9	5.0	2.5
	여	100.0	21.1	23.1	41.2	11.5	3.1
2015	계	100.0	23.4	26.8	37.9	8.8	3.1
	남	100.0	27.7	31.1	31.0	6.7	3.4
	여	100.0	17.1	20.5	48.0	11.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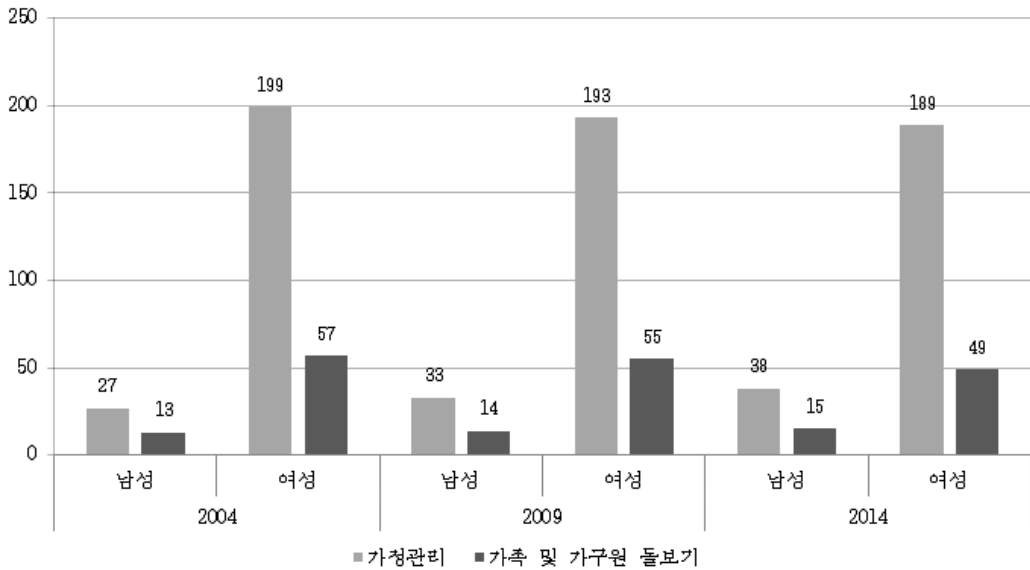
주 : 19세이상 인구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행복하게 유지하고 있는 일하는 여성의 삶이 실제 어떤지 알아보려면 기혼 남녀의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된다.

[그림 2-5] 가사노동시간

(단위 : 분)



주 : 20세이상 인구, 기혼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각 연도)

기혼 남녀의 가사노동시간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2014 년에도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일하는 여성이 50%를 넘어서는 현실을 생각할 때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필요성이 더욱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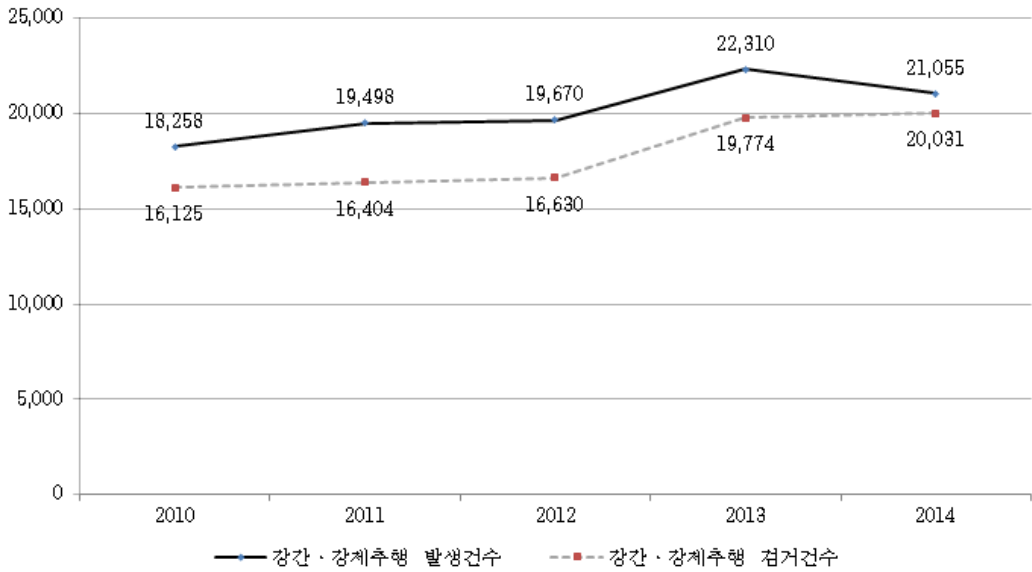
3. 여성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최근 여성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분야가 바로 안전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성범죄 포함)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여성 혐오’에 근거한 범죄가 불특정 여성에게 자행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어 여성들의 안전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의 발생과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6] 강간·강제추행 발생 및 검거 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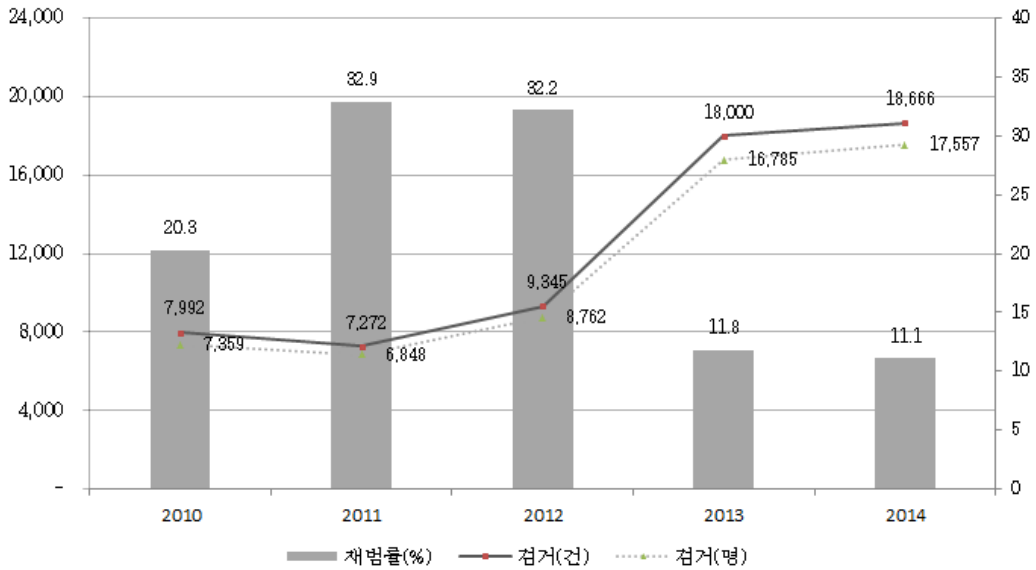


자료 : 경찰청, 「경찰정보통계」,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2014)

강간 및 강제 추행은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해 발생하고 있고, 그 수는 위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2014년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2-7] 가정폭력 검거 및 재범률

(단위 : %, 건, 명)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2014)

가정 폭력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위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엔 검거된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재범률은 감소했지만, 검거 상황으로 볼 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은 범죄에 취약한 자신들의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여성들도 사회 안전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범죄위험에 대한 사회 안전 인식 비율

(단위 : %)

구분	2010		2012		2014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우 안전	0.5	0.4	1.1	0.6	1.8	0.3
비교적 안전	7.6	4.7	12.4	5.7	11.1	5.8
보통	33.7	24.6	28.3	22.5	31.6	24.4
비교적 불안	44.9	48.4	41.6	44.5	40.1	45.8
매우 불안	13.3	21.8	16.6	26.7	15.3	23.6

주 : 15세이상 인구(2010), 13세이상 인구(2012, 201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연도)

안전에 대한 불안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성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많이 투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 시민 성평등 의식 제고

시민들의 성숙한 성평등 의식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여성의 정치분야 진출 현황을 꼽을 수 있다. 대전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여성의 대표성 분야는 많은 성장이 있었다.

대전시 광역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이 2002년 15.8%였던 것에서 2014년 27.3%로 상승했다. 6대 광역시 중 광주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09년 10.1%에서 2014년 14%로 증가했으며, 6대 광역시 중 광주(14.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대전지역이 얼마나 성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 여성과 남성은 다르게 응답했다.

〈표 2-4〉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2015	전체	평등			보통	불평등			5점 평균
			매우 평등	약간 평등			약간 불평등	매우 불평등	
전체	100.0	23.9	1.9	22.0	59.0	17.1	16.4	0.8	3.08
남성	100.0	25.5	2.0	23.5	61.4	13.1	12.7	0.5	3.14
여성	100.0	22.5	1.8	20.7	56.8	20.7	19.7	1.1	3.02

자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사회조사」(2015)

2015년 대전시 사회조사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지역 사회의 성평등 현황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평점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은 더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환경의 변화

1.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흐름

1) 취약 여성 보호와 여성 발전

여성정책의 시작은 1980년대 국가 발전 계획의 한 부분으로 ‘여성개발계획’이 포함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 여성을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자원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정책을 고민했다. 국가발전 과정에 여성이 참여해야 한다는 정책적 관점은 1975년 UN 세계여성대회에서 제기된 관점, 즉 ‘Women’s Integration into Development(WID)’ 관점을 받아들인 것이다(구미현 외, 2015:16). 이러한 관점은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에 여성부문을 포함하는 실행으로 나타났

다. 한국사회의 발전에 여성은 노동자원(여성가족부, 2015)이면서 또한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어머니)으로 인식됐고,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여성정책 사업으로 모색됐다.

여성을 양질의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계획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교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문제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전략이 이 시기에 논의됐다. 각종 교육과 훈련 사업들이 여성정책의 한 부분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노동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된 사업들이 돌봄 사업들이었다. ‘영유아 보육’과 ‘모자복지’ 등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여성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졌다.

여성정책이 취약한 여성이나 일부 소외된 보호받아야 할 여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성의 삶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제정된 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이다.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특정 여성 집단이나 특정한 상황에 처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여성정책이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원해야 함을 명시한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수립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은 일부 소외된 여성을 보호하는 제한된 여성정책에서 벗어나 일반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폭넓게 포괄하게 되었다(민무숙 외, 2011: 5).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와 6대 기본전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목표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녀평등의 촉진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3. 여성의 복지 증진
6대 기본 전략(부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2.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3.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체제 확립 4. 다양한 여성·가정 복지서비스의 확충 5.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6.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 역할 증대

자료 : 민무숙 외(2011)에서 부분 발췌.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20대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성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과제가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등 3건, ‘여성 고용의 촉진’ 등 취업과 근로 여건 개선을 명시한 과제가 3건을 차지하고 있다. ‘요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 이나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증진,’ ‘여성농어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 과제도 4건에 달해 복지 정책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을 통한 여성 역량의 강화와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 확대를 강조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은 이전까지 남성보다 덜 ‘발전한’ 삶을 살아온 여성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남성만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성 발전 프레임’에 근거하고 있다(구미현 외, 2015: 18-19). 남성처럼 처우 받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은 균등한 발전 혹은 성불평등한 상황의 균등한 개선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적인 위치에 있던 여성의 삶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화된 여성의 삶, ‘여성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취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2) 평등한 처우와 여성 특화 전략 간 갈등

남성과 같은 처우와 남성만큼의 성장을 기준으로 삼았던 ‘발전 패러다임’은 2000년 대 이후 ‘여성이 처한 독특한 현실’ 혹은 ‘여성만의 특수성에 기인한 불평등함’에 주목했다. 무조건 ‘똑같이, 남성이 받는 것처럼 균등하게’란 정책 패러다임은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열악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이미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에 부딪혔고,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여성 특화 전략’에 대한 고민을 담기 시작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이 1차 계획과 다른 점은 여성정책 추진에 따르는 실질적인 효과를 고민한 흔적이 있다는 점과, 처음으로 ‘성 주류화’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여성정책이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조직 및 제도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전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목 표	1.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2. 지식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3.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4.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추 진 전략	성 주류화 협력체계 구축
10대 핵심 정책 과제	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2.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3.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5. 사회·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구분	내용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7. 여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자료 : 민무숙 외(2011)에서 발췌.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성 주류화 협력 체계 구축을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다(민무숙, 2011: 176). 정책 파트너로서 여성 단체 및 활동가와의 협력 관계 구축 혹은 지원에 대한 구체적 안이 계획에 명시된 특징이 있다. 또한 2차 계획은 여성정책의 폭을 넓혔다는 평을 받는다(민무숙 외, 2011: 176). 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는 여성만이 아닌 일반적이고 다양한 여성 집단에 대한 관심이 계획에 포함됐다. ‘건강권’ 과 ‘연금수급권’ 등의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요보호 여성이 아닌 다양한 집단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책 사업들의 중요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수정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젠더 전문가들로부터 성평등 전략의 축소가 나타났다고 비판받았다(구미현 외, 2015: 22-23). 정권이 바뀌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추진체계가 축소되었고, 2008년 수정에서 영역이 5개에서 3개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수정된 3차 계획이 2차 계획에서 발전해, 보다 정교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여성정책의 범위 자체도 축소하여 여성정책의 거시적 비전이 제대로 과제에 담기지 못했다고 비판한다(민무숙 외, 2011: 17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전	성숙한 성평등 사회
목 표	1. 여성의 역량 강화 2. 다양성과 차이 존중
영 역	인력, 권익,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14개 핵심 정책 과제	1. 여성인력 활용 기반 내실화 2.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3.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 4. 여성 일자리 확대 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6. 여성의 건강 보호 7. 대상별 여성복지육구 충족 8.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9. 각종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1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11. 이주여성 정착 지원 12. 성인 정책의 시행 13.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14. 평등문화 확산

자료 : 민무숙 외(2011)에서 수정 발췌.

수정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 인력의 활용을 보다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적 특성인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과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과제에 여러 세부 과제로 반영됐다. 3차 계획에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한 과제나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점은 이전까지 ‘남성보다 열등한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여성의 특수성’에 보다 집중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시기였기 때문에 다양성과 차이 존중이 강조되면서 다문화여성의 사회통합과 보호체계 구축 관련한 과제들이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2000년 중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도 커진 시

기이고, 결혼이주여성 가정 내 여러 문제들-폭력과 이혼을 포함한 다양한 갈등이 관심을 끌던 시기였다. 3차 계획에 더 이상 ‘요보호 여성 정책 패러다임’은 없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구미현 외, 2015: 27), 새로운 ‘요보호 여성’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이 이 때 계획에 등장한 것이다.

3) 성 주류화 전략의 적극적 도입

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정책은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전략’의 적극적 수용에 따라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부터 등장한 ‘성평등’ 패러다임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성 주류화 제도의 강화와 함께 더욱 강조됐다.

모든 정책 영역과 사업의 성평등한 변화를 모색하는 성 주류화 전략은 여성정책의 대상을 여성 모두로 확장하면서 동시에 남성도 고려하는 ‘양성평등 패러다임’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젠더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불평등함을 고려하는 성 주류화 전략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확산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이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수립의 방향으로 ‘성평등 정책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다(여성가족부, 2013). ‘성인지적 관점’을 여성의 삶 모든 영역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4차 계획은 여성과 남성을 아우르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요구하고 혜택 받는 정책을 지향한다고 수립방향에서 밝히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28).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8>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전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목 표	1. 성별 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2.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3. 일과 가족의 조화
7개 정책 과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자료 : 여성가족부(2013)에서 발췌.

제4차 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어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3년간 추진되었는데,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과제들 못지않게,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관련한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여성의 안전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4개의 중과제가 포함됐다.

성 주류화 전략의 확산을 목적으로, 3개의 중과제가 채택되었는데,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강화’나 ‘기반의 정비’가 명시되었으며,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가 주요하게 중과제로 명시됐다. 여성가족부는 4차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전의 성과와 추진결과 분석을 내놓았는데, 성인지적 정책 개선과 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의 총괄적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제도 간 연계 및 내실화가 강조된 이유다.

제4차 계획에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 돌봄 관련 과제들은 계속 강조됐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나 육아 휴직 등 여성뿐 아닌 남성을 포함한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제시됐다.

2. 양성평등기본법과 대전시 양성평등기본조례

1)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과 여성정책

‘여성발전’의 정책 패러다임이 ‘양성평등’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음을 공식화 한 결과물이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기존의 여성정책을 남성과 여성 간 관계에 근거한 불평등함을 제거하는 노력으로 바라보고자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의 개념은 이 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의 능력 개발이나 사회참여 촉진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남성과 여성이 누려야할 권리와 책임, 그리고 참여 기회 보장을 명시한다(여성가족부, 2016). 법의 목적(제1조)에 헌법에 나타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개정,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도록 명시했고, 성 주류화 제도-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등의 확산을 위한 조치를 구체화한 특징이 있다(여성가족부, 2016: 21).

‘여성발전 프레임’의 큰 특징인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성 역량 개발 혹은 발전,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여성 교육과 육성 사업에 대한 강조 등은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 사업의 중요성 강조로 기조가 바뀌었다(구미현 외, 2015).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兩性)’을 중심으로 한 평등 사회를 지향하다보니 인간의 삶에서 ‘성(gender, sexuality)’이 차지하는 다양한 역할과 영향력을 간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는 정책적 허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성평등기본법’이 아니라 ‘양성평등’ 기본법이기에 때문에, 남성의 처지나 상황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

킨 점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아직 대다수 여성의 처한 현실이 남성보다 열악하다는 점과 여성과 남성 사이의 권력 관계를 간과할 수 있다는 치명적 약점 또한 이 법은 가지고 있다. 특히, 기존에 ‘요보호 여성’ 집단으로 분류되어 보호 및 지원을 받던 대상들-성매매피해여성,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이 매우 부분적인 요소로 축소될 위험도 없지 않다(구미현 외, 2015: 29).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의 관점 도입으로 논쟁적이라는 평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지수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처음으로 ‘양성평등 실태’ 현황을 조사하도록 명시하는 등 장점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제정과 여성정책

2015년 10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시행된 연혁이 있다. 대전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목적).

양성평등기본조례는 크게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성인지 예산을 비롯한 ‘성 주류화 제도의 지원’ ‘적극적 조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여성인재 관리 및 육성’ ‘성폭력 등 위협으로부터의 여성 안전 제고’ ‘복지 증진’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는 이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있던 ‘영유아보육’ 이나 ‘모성 보호’ 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고, 양성평등 교육에 있어 공무원 대상 교육만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을 강조한 조항이 추가됐다.

조례 제17조(양성평등 교육)에 따르면, “① 시장은 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에는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② 시장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여성가족원에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강사들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 양성평등 교육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여성 복지에서 여성친화도시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성평등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의 협력 등을 강조한 대전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새롭게 제정된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2013년 6월 제정)」와 함께 지역사회 성평등 확산의 법적 추진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제 3 장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 분석

제1절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흐름과 변화

제2절 2013~2015년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제3절 정책과제 추진 성과 분석 시사점

제3장 양성평등정책 추진 성과 분석

제1절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흐름과 변화

1. 2013~2016년 정책과제 흐름과 변화

1) 조례 내용에 따른 정책과제 분석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들의 흐름과 변화를 본 절에서는 양성평등기본조례의 내용에 따라 분류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례는 양성평등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정책 사업들은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조례의 어떤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조례와 양성평등정책 사업들 간 호응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3-1〉 양성평등기본조례 내용에 따른 정책과제 분류(2016년)

조례 내용	과제명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정책결정과정 참여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성 주류화 제도 추진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효과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운영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성인지 예산과 관련제도의 연계 강화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

조례 내용	과제명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 강화
	양성평등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일·가정 양립 지원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활성화
	아버지학교, 아버지교육 등 활성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강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강화
	가족친화인증 확대
	국공립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제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강화(복지증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여성기업 지원 및 경영인프라 확충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여성친화기업 확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여성 근로자 경력개발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단절 예방 및 역량강화 지원

조례 내용	과제명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복지증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실화
	여성 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정책결정과정 참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강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서비스 확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실효성 제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 지원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안전망 강화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복지증진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확대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미혼모부자 가족 자녀양육 등 지원 강화
양성평등 교육	직업훈련 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 강화
양성평등 문화조성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강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확산

양성평등기본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분류해본 결과, 성 주류화 제도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상당부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주류화 제도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은 2016년 양성평등기본법과 조례의 본격 추진과 함께 강화된 분야라 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들을 분류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아래 <표 3-2>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추진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들 중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성 주류화 제도’와 부합하는 사업들을 분류한 결과다.

<표 3-2>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른 정책과제 분류-성 주류화 제도(2013~2015년)

조례 내용	연도구분		
	2013	2014	2015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정보제공, 주요 정책의 평가	성인지통계 생산·점검체계 구축		
	성인지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지수 활용도 제고		
	주민참여예산-성인지예산 연계체계 구축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해 추진했던 성 주류화 제도 관련 사업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6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사업들보다는 수도 적었고 공무원 교육,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등 대상을 확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조항과 부합하는 사업들도 17건이나 되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조항 관련한 사업들은 11건이나,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둔 과제가 7건으로, 정작 ‘예방’

1) 중복분류

을 위한 과제들은 보다 더 발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복지 증진 조항과 관련한 사업들은 적었지만,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조항과 관련한 사업들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조항 관련한 사업들 중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 등은 복지 사업에도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자립을 보장하는, 취·창업 관련한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조항에는 14개의 사업들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사업들이 여성의 일자리 확충 관련한 사업들로 분류됐다.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여성정책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2016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사업들 중 이전까지는 없었던 신규 사업들을 살펴보면, 성 주류화 제도 관련한 사업들-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강화,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실시 등이 확대 강화되었고,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 강화 등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예산도 증액됐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나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확대 등의 사업들이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복지 사업들은 축소되거나 통합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양성평등정책의 지향점이 복지와 돌봄에서 양성 평등한 참여와 기회 보장 쪽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추진 성과별 정책과제 분석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사업들은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과 관련한 사업은 경제산업국의 기업지원과에서, 평생교육 관련한 사업은 자치행정과의 교육담당이 운영할 수도 있다. 개별 사업들이 어떤 성과에서 추진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모든 정책 영역’에서 양성평등정책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다양한 추진부서와 체계를 가지고 추진될 때 양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확산에 더 충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시행된 여성정책 사업들의 추진 실적별 분류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여성정책 추진 실적 및 추진 정책 수(2013~2015년)

추진 실적		추진 정책 수
보건복지 여성국	여성가족 청소년과	34
	저출산고령사회과	9
	보건정책과	5
	장애인복지과	4
	노인보육정책과	1
소계		53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1
	일자리추진기획단	1
소계		2
자치행정국	총무과	4
	교육후생담당	1
소계		5
과학경제국	대전광역시 과학문화산업본부 과학특구과	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1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	2
	5개 기초자치단체	10
총계		74

위 표에 나타나듯이, 가장 많은 수의 여성정책사업이 여성가족청소년과를 통해 추진되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다음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과로 9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보건정책과가 5개로 그 다음으로 많은 과제를 추진했다.

총 74개의 여성정책 사업들 중 절반이 넘는 53개의 사업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됐으며, 자치행정국이 모두 5개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경

제국(이전 경제산업국)에서 추진된 경제활동관련한 사업은 모두 3건이다.

시정 전반을 총괄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기획조정실 사업은 1건으로 나타났다. 직속기관들 중에서는 농업기술센터만이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성평등 지수 지표별 정책과제 분석

대전시는 매년 발표되는 <지역 성평등 지수>의 지표별 결과에 따라 집중할만한 사업들을 고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다. 성평등 지수 발표 때마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지표와 관련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성평등 지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온 것이다. 본 절에서는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별로 여성정책(양성평등정책) 사업들을 분류해 보고, 성평등 지수가 낮은 영역에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 시행사업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대전지역 성평등 지수 결과는 양호한 편이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과 복지’ 그리고 ‘성평등 의식과 문화’로 크게 나뉜 영역 지표들에서 대전시는 점수도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고 순위도 상승했다. 세 영역이 모두 상위권인 유일한 지역으로 분류된다(주재선 외, 2015).

대전광역시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대전광역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2014년 기준)

영역 및 세부지표	점수	순위
경제활동	70.2	6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68.3	10
성별 임금 격차	61.4	6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81.0	3
의사결정	38.9	2

영역 및 세부지표	점수	순위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40.4	2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4.2	2
관리자 비율 성비	42.0	2
교육과 직업 훈련	94.6	7
평균 교육년수 성비	98.3	7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복지	79.6	3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85.6	4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격차	73.7	8
보건	97.1	5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5	9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97.7	5
안전	63.1	8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5.0	7
강력범죄(홍악범)피해자 비율 격차	61.3	10
가족	69.1	3
가사노동시간 성비	29.6	3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92.4	13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83.0	16
육아휴직자 성비	71.3	1
문화와 정보	91.5	1
여가시간 성비	82.6	2
여가 만족도 성비	100.0	1
인터넷 이용률 성비	91.9	6

자료 : 주재선 외(2015)에서 수정 발췌.

대전시 성평등 수준은 16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안전 영역이 8위로 가장

낮으며 문화·정보 분야와 의사결정 분야는 각각 1위와 2위로 상위 수준에 있다. 영역 순위가 높더라도 눈여겨 봐야할 지표는 ‘가족’ 과 ‘경제활동’ 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전은 높지 않다. 이런 점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부문에서 성평등 순위가 10위에 머물렀다. 또한, 가부장적 사고 혹은 성역할 고정 관념 등 성평등 인식과 반대 지점에 있는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 16개 시·도 중 16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문화적으로 성평등 확산의 토대가 많이 약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지표도 13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일상생활에서의 성별격차 혹은 양성 간 인식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2016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대전시 시행계획을 포함해, 2013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여성정책 사업을 지역 성평등 지수 지표 체계에 근거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3-5>는 성평등 지수 영역 중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으로,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교육과 직업훈련 관련한 사업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3-5> 성평등지수-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 과제와 예산

(단위 : 백만원)

분야	과제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성 평 등 한 사 회 참 여	경제 활동	경력단절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운영	769	752	1,782	2,051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9,630	23,265	22,994	27,150
		여성농어업인 경영성공사례 발굴	30	12	비예산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77	77	82	-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119	6	10	20
		여성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193	57	462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개선	1,610	905	1,782	-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7,400	6,000	7,000	7,000
		직업훈련 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 강화	-	-	-	315
		여성친화기업 확대	-	-	-	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실화	-	-	-	2,011

분야	과제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사 결정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	-	-	비예산
교육 · 직업 훈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지원	70	70	70	70
	중·장년여성 직업역량 강화지원	440	866	1,791	2,092
	농어촌여성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100	36	7	7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1,456	17,843	15,448	-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132	132	96	119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	50	50	50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	134	134	-
	여성결혼이민자취업역량강화지원	-	90	66	-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	비예산	비예산	-
	계	22,026	50,295	51,774	38,559

의사결정 관련한 사업 예산이 모두 비예산임을 감안하면, 사회참여 영역의 사업들 중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활동 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2014년과 2015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2016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서비스일자리나 자활지원 사업 등이 2016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 <표 3-6>은 성평등 지수 영역 중 ‘여성의 인권과 복지’ 영역 사업들로, 복지와 보건 그리고 안전 관련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표 3-6> 성평등지수-여성의 인권과 복지 영역 과제와 예산

(단위 : 백만원)

분야	과제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여성의 인권·복지	복지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1,419	2,780	3,589	-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강화	164	164	179	476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363	412	409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확대	-	5	5	172
		한부모 복지 급여 확대	-	2,890	3,376	6,94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1	22	44	-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289	443	526	1,821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사회의 수용성 제고	11	11	8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체계화	263	278	237	-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확충	-	-	350	-	
	보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	-	14	3	-
		안전	성폭력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712	210	79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448	385	394	370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1,013	1,039	1,029	1,102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33	143	151	553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69	69	69	46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등 방지 내실화		11	8	8	2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	104	1,030	158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	32	-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강화	-		-	-	80	

분야	과제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실효성 제고	-	-	-	740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	-	161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	-	6
계		4,916	8,959	12,235	13,951

복지와 인권 영역의 사업들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종류가 늘어났고, 폭력에 대응하는 예산이 증액됐다. 2016년 안전 관련한 사업 종류와 예산이 증가한 점은 낮은 성평등 지수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형적인 복지 사업들은 종류가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업들이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3-7>은 성평등 지수 영역 중 ‘성평등 의식과 문화’ 영역 사업들로, 가족과 돌봄 그리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관련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표 3-7> 성평등지수-성평등 의식과 문화 영역 과제와 예산

(단위 : 백만원)

분야	과제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성 평 등 의 식 · 문 화	가족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증장기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1,317	1,685	이월 예산	5,381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500	480	357	1,584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100,963	118,451	236,201	197,056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18,761	20,143	20,143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제고	2,969	3,756	3,463	3,495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275	633	828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40	40	40	74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자격관리 강화 및 처우개선	70	비예산	비예산	-

분야	과제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95	381	108	113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95	101	비예산	113
	아버지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교육 등 활성화	2	5	3	40
	가족친화환경 조성 노력 확산	50	567	40	비예산
	불법 국제결혼증가에 대한 단속 강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169	169	174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279	1,763	1,581	1,831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209	69	44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	10,870	11,194	8,14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	410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	-	비예산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강화	-	-	-	10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	-	-	788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	-	-	523,418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강화	-	-	-	20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	-	-	40
문화 · 정보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69	76	76	-
	주민참여예산-성인지예산 연계체계 구축	43	41	53	51
	성인지통계 생산·점검체계 구축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인지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6	7	7	비예산

분야	과제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제공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	10	10	비예산	비예산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지수 활용도 제고	45	36	42	34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비예산	7,187 ²⁾	210	219
	취약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	12	비예산	-
	일상에서 실천하는 평등문화 사례 발굴·확산	-	10	비예산	-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	-	1.8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	-	-	-	비예산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교육 실시	-	-	-	43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운영	-	-	-	87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내실화	-	-	-	57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	-	-	1.8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	-	-	40
	계	125,967	166,492	274,974	742,638

사업의 수도 많고, 특히 영유아 돌봄 관련해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이 포함된 ‘성평등 의식과 문화’ 영역은 예산액이 세 영역 중 가장 많다. 영유아 돌봄 관련한 예산은 법에 근거해 집행액이 크게 증가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교육 예산이 2016년에 다소 증가했다. 양성평등 인식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부분이다. 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이 2015년과 2016년에 지속적으로 편성됐다.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비도 이전년도에 비해 증

2) 서구청에서 자체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이 포함됨.

가한 경향을 보인다.

2. 2013~2016년 예산 흐름과 변화

본 절에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 사업들의 예산 책정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동소이해 보이는 사업들이지만, 같은 사업이라 해도 시행 연도에 따라 예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산의 증감은 당시 시정 현안이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시민의 요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여성정책기본계획 2015년 대전시 시행계획」에 명시된 정책사업 분류 기준-①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②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③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및 여성폭력 예방, ④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강화, ⑤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⑥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에 따라 사업들을 분류하여 각 사업들의 예산 책정 현황을 연대순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의 흐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영역에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19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7개의 사업은 2013년에서 2016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포함된 사업들이 있는 반면, 2016년 계획에는 이 영역에서 빠진 사업들도 있다.

다음의 <표 3-8>은 경제적 역량강화 영역에 포함된 사업들과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사업별 예산 현황이다.

<표 3-8> 정책과제 예산 현황-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단위 : 백만원)

과제 구분	정책 과제명	연도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여성의 경제적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지원	70	70	70	70
	경력단절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운영	769	752	1,782	2,051

과제 구분	정책 과제명	연도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역량 강화	중·장년여성 직업역량 강화지원	440	866	1,791	2,092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9,630	23,265	22,994	27,150
	농어촌여성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100	36	7	7
	여성농어업인 경영성공사례 발굴	30	12	비예산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77	77	82	-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119	6	10	20
	여성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193	57	462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개선	1,610	905	1,782	-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7,400	6,000	7,000	7,000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	비예산	비예산	-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	50	50	50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	134	134	-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522	39	-
	여성결혼이민자취업역량강화지원	-	90	66	-
	직업훈련 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 강화	-	-	-	315
	여성친화기업 확대	-	-	-	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실화	-	-	-	2,011	
계		20,438	32,842	36,269	40,773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2013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은 2013년에 비해 예산이 3배가량 증가했다. ‘경력단절여성 조기복귀 프로그램 운영’이나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지원’ 사업들은 2013년에 비해 예산이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 사업들이다. 경력단절 예방과 취업활동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혼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중요성이 사

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사업의 예산도 대폭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의 흐름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영역에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모두 21개의 사업이 추진됐다. 이 중 11개 사업이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이 영역 사업으로 분류됐다.

다음 <표 3-9>는 돌봄과 일·가족 양립 관련한 사업들의 예산 배분 현황이다.

<표 3-9> 정책과제 예산 현황-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단위 : 백만원)

과제 구분	정책과제명	연도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1,317	1,685	이월 예산	5,381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500	480	357	1,584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100,963	118,451	236,201	197,056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18,761	20,143	20,143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제고	2,969	3,756	3,463	3,495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275	633	828	-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289	443	526	1,821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40	40	40	74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자격관리 강화 및 처우개선	70	비예산	비예산	-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95	381	108	113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95	101	비예산	113
	아버지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교육 등	2	5	3	40

과제 구분	정책과제명	연도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활성화				
	가족친화환경 조성 노력 확산	50	567	40	비예산
	일상에서 실천하는 평등문화 사례 발굴·확산	-	10	비예산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	10,870	11,194	8,14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	410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	-	비예산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강화	-	-	-	10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	-	-	788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	-	-	523,418
	계	125,426	157,565	273,313	742,034

2013년에 비해 돌봄 관련한 예산은 대폭 그 규모가 커졌다. 1천2백5십 억원 규모에서 7천4백 억원 대로 사업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산 규모의 확장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라는 신규 사업 예산이 크게 작용했다.

‘무상보육’ 이 실현되면서 보육 관련한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이 주효했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2015년에 비해 3배 가량 예산이 증액된 특성을 보인다.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에 따라 수립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사업들이 시행된 2016년에는 ‘아버지 교육’ 관련한 사업과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사업 예산이 이전년도들에 비해 크게 증액됐다.

3)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사업 예산의 흐름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영역에는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모두 13개의 사업이 추진됐다. 이 중 6개 사업이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꾸준히 이 영

역의 사업으로 분류돼 시행되어 왔다.

다음 <표 3-10>은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관련한 사업들의 예산 배분 현황이다.

<표 3-10> 정책과제 예산 현황-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단위 : 백만원)

과제 구분	정책과제명	연도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	104	1,030	158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	-	32	-
	성폭력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712	210	796	1,31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448	385	394	370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1,013	1,039	1,029	1,102
	불법 국제결혼증가에 대한 단속 강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33	143	151	553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69	69	69	46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등 방지 내실화	11	8	8	2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강화	-	-	-	80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실효성 제고	-	-	-	740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	-	161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	-	6
계		2,386	1,958	3,509	4,537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관련한 사업 예산도 2013년에 비해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폭은 앞선 두 영역에 비하면 크지 않다. ‘성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사업이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띄며,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사업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나타났다.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예산이 매년 6천9백 만원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 4천 6백 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사업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 강화’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경향이 나타났다.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사업 예산의 흐름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영역에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모두 16개의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6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으로는 많은 사업들이 삭제되어 5개의 사업만이 남았다.

다음 <표 3-11>은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관련한 사업들의 예산 배분 현황이다.

<표 3-11> 정책과제 예산 현황-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단위 : 백만원)

과제 구분	정책과제명	연도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여성 ·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1,456	17,843	15,448	-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1,419	2,780	3,589	-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강화	164	164	179	476
	제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363	412	409	-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132	132	96	119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사회의 수용성 제고	11	11	8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체계화	263	278	237	-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169	169	174	-

과제 구분	정책과제명	연도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279	1,763	1,581	1,831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1	22	44	-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209	69	44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확대	-	5	5	172
	한부모 복지 급여 확대	-	2,890	3,376	6,945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	-	14	3	-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확충	-	-	350	-
	취약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	12	비예산	-
	계	4,486	26,564	25,543	9,543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사업들은 2016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대 전시 시행계획에서 크게 축소되었다. 예산상으로도 절반 이상이 감액됐다. ‘여성 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사업이 2015년에 비해 크게 증 액되었고, ‘한부모 복지 급여 확대’ 사업 또한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확대’ 사업이 5백 만원 에서 1억 7천여 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사업 예산의 흐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영역에는 세 개의 사업이 분류됐으며, 모두 비예산 사업인 특성이 있다.

〈표 3-12〉 정책과제 예산 현황-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단위 : 백만원)

과제 구분	정책과제명	연도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	-	-	비예산

6)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사업 예산의 흐름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영역에는 17개의 사업이 분류됐으며, 6개의 사업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꾸준히 이 영역의 사업으로 분류돼 추진됐다.

다음 〈표 3-13〉은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관련한 사업들의 예산 배분 현황이다.

〈표 3-13〉 정책과제 예산 현황-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단위 : 백만원)

과제 구분	정책과제명	연도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69	76	76	-
	주민참여예산-성인지예산 연계체계 구축	43	41	53	51
	성인지통계 생산·점검체계 구축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인지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6	7	7	비예산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	10	10	비예산	비예산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협조부서 등 정책 총괄·조정 체계 정비	-	-	비예산	비예산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지수 활용도 제고	45	36	42	34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비예산	7,187	210	219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	-	-	비예산	-

과제 구분	정책과제명	연도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	-	1.8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	-	-	-	비예산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실시	-	-	-	43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교육 및 운영	-	-	-	87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내실화	-	-	-	57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	-	-	1.8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강화	-	-	-	20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	-	-	40
	계	173	7,357	388	554.6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사업 중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사업’ 이 2015년과 2016년에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고, 2016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은 대부분 이전 사업들의 이름이 바뀐 경우로 보인다.

7) 특화사업 예산의 흐름

대전시는 특화사업으로 2013년에서 현재까지 모두 4개의 사업을 추진했다.

다음 <표 3-14>는 특화사업들의 예산 배분 현황이다.

〈표 3-14〉 정책과제 예산 현황-특화사업

(단위 : 백만원)

과제 구분	정책과제명	연도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특화사업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	15,000	-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2,200	-	-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지원	-	-	200	-
	대전 평화의 소녀상 건립	-	-	50	-
계		-	17,200	250	-

특화사업은 당해년도 계획되어 추진을 완료하는 경우가 많다. 센터의 건립이나 새로운 기관의 설치, 조형물 건립 등이 이에 해당됐다.

제2절 2013~2015년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1. 시행계획 과제별 평가 점검 지표

1) 여성정책 시행 점검 지표 사례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을 위해 꾸준히 점검 지표를 개발하고 정해진 점검틀로 여성정책의 이행 성과를 검토해 왔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점검했는데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는 ‘타당성’ ‘합목적성/충실성’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의 근거’ ‘예산’ 으로 구성됐다(민무숙 외, 2011: 11).

〈표 3-15〉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점검지표

점검 지표	점검 내용
타당성	- 사업목표가 상위목표와 부합하는지 - 사업목표 및 계획이 구체적인지
합목적성/충실성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세부사업)이 적절한지 - 세부사업의 예산, 인력, 프로그램 등이 적절하고 충분한지
목표달성도	- 당초 계획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인 경우 평균적 달성도를 의미)
목표달성도의 근거	- 실적보고 내용이 목표 달성 기재 내용을 정당화하는지(목표달성도 지표의 연계 지표임)
예산	- (여성가족부) 작성양식에 기재된 예산액(단위: 천원)

자료 : 민무숙 외 (2011)에서 발췌.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여성발전 5개년 계획(2004~2008)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이은아 외, 2008). 여성가족부와 동일하게 이행점검의 대상을 과제 단위로 정하고, 평가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과 정책영역 모두를 포함한 특징이 있다.

〈표 3-16〉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이행점검 틀

구분	점검 항목	점검 지표	점검 내용
기관 역량 평가	집행 기관	법 및 제도	- 법 및 제도가 잘 정비되었는가
		조직 및 인력	- 조직체계가 갖추어졌는가 - 인력의 규모가 적절한가
		재정	- 예산 규모가 적절한가 - 예산 비중이 확보되었는가 - 기금액이 충분한가
정책 영역 평가	정책 형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와 부합하는가 - 정책목표 및 계획이 구체적인가 - 정책목표 및 계획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구분	점검 항목	점검 지표	점검 내용
	정책 집행	정책 수단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었는가 - 세부사업이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가 - 정책추진을 위한 기구, 예산, 인력, 프로그램,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정책 성과	정책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목표한 사업이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 정책목표에 달성하였는가 - 젠더관계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가

자료 : 이은아 외 (2008)에서 발췌.

제주도는 제4차 제주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 평가를 위해 정책 영역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수정안을 도출하는 연구(문순덕 외, 2012)를 수행했다. 단위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별 정책 사업 계획과 추진에 대한 ‘타당성’ ‘합목적성(충실성)’ ‘목표달성도’ 를 점검한 뒤 총평과 향후 과제를 도출했다.

2) 점검 방법과 지표

이 장에서는 대전시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각 사업들이 지역 여성의 현황을 반영하고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연구자의 판단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2015년 추진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사업들의 예산과 추진실적,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분야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업별로 수렴했다.

현장 전문가들은 대전지역 여성과 가족 정책 관련한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정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분야별 사업에 대한 정량적 표기(점수 표기)와 정성적 평가 기술을 병행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과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로 요약된다.

<표 3-17> 여성정책 영역별 현장 전문가 조사 과정과 참여자 특성

조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여성정책 영역별 전문가 3~5명씩 개별 서·대면 자문 - 총 22명의 대전지역 현장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 - 조사 수행 기간: 2016. 9. 12 ~ 9. 30. - 총 14명 참여
조사 영역	참여 전문가의 특성
일자리	- 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 팀장 등 종사자
돌봄과 건강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돌봄시설 팀장 등 종사자
성폭력 예방	- 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취약계층 복지	- 복지기관 팀장, 연구원, 여성단체 대표 등
성평등 문화 확산	- 여성단체 활동가 등

5개 영역별 현장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당되는 분야의 사업들의 내용과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고, 점점 대상 사업이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대상 사업이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량적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또한, 정량적 의견 제시 후에는 보다 자유롭게 대상 사업에 대한 점검 의견 혹은 개선 요구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의 <표 3-18>은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사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전문가 용 점점 양식이다.

〈표 3-18〉 현장 전문가 대상 정책 사업 점검 양식의 예

세부 사업명	‘15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황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일 의견 (사업별)
		성과 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여대생 경력 개발 지원 확대	50	이용자 (명)	2,550	2,55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본 점검의 목적은 기본계획 사업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2017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정량적 점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현장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자의 의견을 비교해 점검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들 즉, 확대 강화가 필요한 사업과, 버려야 할 사업들 즉, 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2015년에 시행된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사업들을 다음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적(성과목표 달성도)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자의 평가, 그리고 분야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교, 정리해 제시하고자 했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점검 지표(민무속 외, 2011) 중 ‘사업 추진의 합목적성’ 과 ‘충실성’ 에 대해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란히 제시하는 양식이다. ‘합목적성/충실성’ 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세부사업)이 적절한지, 그리고 세부사업의 예산이나 인력, 추진 방식 등이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는 지표다. 이 지표를 통해 대상 사업이 성평등 확산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목표와 부합하는지도 점검해 보고자 했다.

다음의 〈표 3-19〉는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연구자의 의견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할 수 있는 점검 양식이다.

<표 3-19> 대전시 2015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적 점검표(안)

세부 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 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2.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

이 장에서는 2015년 시행된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개별 세부사업들은 그 특성에 따라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일자리’,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대분류로 나누어졌다. 특히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많은 세부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폭력 예방 사업’, ‘취약계층 복지 사업’, ‘돌봄과 건강 사업’의 중분류에 따라 나뉘었다.

1)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일자리 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일자리’ 영역에는 모두 14개의 사업들이 2015년에 추진됐다.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7백 만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며, ‘여성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이 229억 9천4백 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개별 세부사업의 성과목표달성 현황과 연구자의 점검 의견 그리고 관련된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다음 <표 3-20>과 같다.

〈표 3-20〉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50	이용자 (명)	2,550	2,5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양한 수혜자 발굴과 확보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예산, 추진 현황, 성평등 확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임. • 수혜대상외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지원	70	수혜자 (명)	8,690	1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역 특성이 반영돼 있고, 고학력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취업정보제공과 훈련 및 상담 등으로 구성돼 있음. 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임. • 정력의 지속을 위한 지원-조직적응력 강화, 문제해결클리닉 등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예산, 추진 현황, 성평등 확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임. • 이공계 전문분야 여성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측면 긍정적임.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협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경력단절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운영	1,782	구직등록 수 (명)	12,815	13,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확산 효과 클 것으로 기대함. •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복귀프로그램 중 진로상담 시간을 늘려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야 함. • 구인구직정보망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큼. • 추진체계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예산, 추진 현황, 성평등 확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임. • 최근 경단여성 대상 사업 확대된 경향 있으나, 실제 30대들은 육아로 인해 참여 어려움.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중·장년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1,791	훈련참여자 (명)	310	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확산 기대효과 클 것으로 기대함. • 정력 진입 시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함. 남성과 임금격차가 큰 상황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상시 여성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예산, 추진 현황, 성평등 확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임. • 실질적 수혜인원(취업까지의 연계)이 적은데 비해 예산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음. • 50대가 주 수혜층인데 비해, 기업은 3,40대 여성을 선호함. • 조직적응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취업지속력이 낮음.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22,994	참여자수 (명)	8,650	11,1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별 특화된 일자리 창출 사업이 필요하며 성평등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함. • 사업별 여성 참여 현황 파악이 꾸준히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점검 필요함. • 모든 일자리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보다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예산, 추진 현황, 성평등 확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있어 다소 긍정적임. • 한시적 일자리가 많이 제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경련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134	지원실적 (명)	37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이 나, 타 사업과의 연계 강화가 요구됨. • 여성과학기술인 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방과후강사를 특화해 양성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예산, 추진 현황, 성평등 확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있어 다소 긍정적임. • 실질적 수혜인원(취업까지의 연계)이 적은데 비해 예산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특정집단(고학력 등) 활용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나, 지속적 일자리인지는 의문임.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39	채용인원	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하고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바 큰 사업이나 성과 규모가 미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확산에는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나, 실추된 성과는 미미함. 정규직(decent job)으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하고, 공공부문으로부터 계속 확산되길 기대함.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7	참여인원	400	5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푸드 생산과 유통 관련해 타 사업과의 연계, 협동조합사업과의 연계 등을 모색해 목적 부합도를 높일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는 큰데, 예산이 적음. 지속적인 확대를 기대함.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66	참여인원	208	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자립 지원 일환으로 중요한 사업임. 사업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시행 주체를 별도로 규명하여 시행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 예산, 추진 현황, 성평등 확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임. 지속적인 확대를 기대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82	수혜인원	72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자립으로의 연계가 미미한 상황임. • 종합복지 성격의 사업은 자칫 평생교육 차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예산, 추진 현황, 성평등 확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임. •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장애인복지관)은 취미활동에 그치는 경우 많음. 실제 창업 인큐베이팅이 필요함. • 장애(집단) 특성별 파악이 필요함.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10	설립수	2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증대 현황을 고려할 때 예산과 추진체계 강화가 요구됨. • 협동조합은 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나, 지속성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함. • 일자리사업 주체가 설립 후 지속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을 기획해 운영해볼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예산, 추진 현황은 다소 부족하나, 앞으로 성평등 확산에 대한 기여 정도가 클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 여성 일자리 영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큼. 지속적 사업 확대가 필요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항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여성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462	참여자	126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이 저소득층 여성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것은 사실이며 초기 자립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임.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성 노동에 대한 평가 체계가 공정한지 점검과 검토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 예산, 추진 현황, 성평 등 확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임. 돌봄노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임. 여성의 돌봄노동을 저평가하는 추세 있음. 돌봄노동에 대한 개념 전환이 요구됨. 남성이 참여하면서 인식이나 형태 등이 변화하고 있음. (남성을 돌보는 남성)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개선	1,782	참여자	26,548	20,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성과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음.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책정과 노력이 요구됨. 진료와 취업 상담이 몇 시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고, 경력력의 지속을 위한 문제해결 클리닉 등이 제공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사회서비스 여성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매우 취약함. 동일임금 적용이 시급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7,000	지원업체 구매율	100 8%	190 10.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기업제품 구매 등은 흥 보가 지속되어야 함. 여성기업제품 구매율의 목 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 예산이 큰 편이고, 성 평등 확산에 대한 기대 큼. 기대만큼 실질적 정책 효과 를 거둘 수 있는지 늘 점검 이 필요함(약용 방지).

2)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

(1) 성폭력 예방 사업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중 비예산 사업인 ‘불법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단속 강화’ 사업부터, 10억 3천 만원이 투입된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사업까지 성폭력 예방 분야 사업들은 모두 9개가 2015년에 추진됐다.

개별 세부사업의 성과목표달성 현황과 연구자의 점검 의견 그리고 관련된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다음 <표 3-21>과 같다.

<표 3-21>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성폭력 예방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성폭력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796	지원인원 참여자수	425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확산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 한 사업이며, 목적에 합하여 추진되고 있음.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 피해자지원시설이 유성구에 부족함. 동·중구에 집 중된 경향 있음. 유성구의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시설 추가 설치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 예산, 추진 현황, 성평등 확산에 대한 기여 정도에 있어 다소 긍정적임. 경찰과 지원센터 간 협력 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함. 피해자를 실제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소 운영 여 건 개선이 필요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394	상담인원 주거지원수	12,000 25	13,38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 지원과 주거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함. • 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의 예산 책정 수준이 미약함. 사업의 기대효과를 생각할 때 주거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 있음. • 대응 상담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확산을 위해 꼭 필요 한 사업임. • 가족현장 상담이 형식적임. 현장대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함. • 피해자 1인 1주거 지원으로의 확대 요구됨.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1,029	상담건수	1,700	1,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사업과 연계된 것은 적절함. •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사업과의 연계 강화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심이 적다보니 성매매의 원천적인 근절을 위한 사업 전계가 미미함. • 성산업 축소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 • 범으로 지원 근거를 강화해야 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1,030	입소자 참여인원	10 10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쉼터가 1개소에 불과한 것은 아쉬움, 유소년 인구와 지역 균형을 생각할 때, 유성구나 대덕구에 청소년쉼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 예산, 추진 현황, 성과 등 확산에 대한 기여 정도가 미흡하다 평가함. • 가출청소년, 빈곤층여성의 성매매 등 대상별 특성화 된 지원이 더 필요함. • 자립을 위한 사업이 강화되어야 함. • 성매매 청소년뿐 아닌,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성매매 근절 종합대책 필요함.
불법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단속 강화	비예산	점검횟수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확산이라는 본 계획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인지 검토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 요구됨.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51	지원인원	2,960	2,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지 검토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 있음. • 결혼이주여성 대상 홍보 강화가 요구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69	제작학교	3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적은 광범위하고 내용도 다양함. 실적 보고자료에 나타난 사업들이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안심귀거나 쉼페인이 지역 연대활성화의 성과인지 검토 필요함. 안전율 목적으로 한 거버넌스의 구축 성과가 더 가시적일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음. 추진체계 주체들이 계속 바뀌는 것도 한 요인임. 지속적인 협의와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도록 연대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연대 운영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 사업비 외 운영 예산 지원이 필요함.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32	지원 지역 아동센터수	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센터 아동 귀가 지원이 여성정책(양성평등정책) 사업으로 적절하지 검토 필요함. 아동 대상 안전교육(성희롱, 폭력 예방 포함) 교육은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 운영이 필요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등 방지 내실화	8	교육횟수 캠페인횟수	2 2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 있음.

(2) 취약계층 복지 사업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 중 ‘취약계층 복지’ 사업은 모두 11개가 2015년에 추진됐다. 5백 만원이 투입된 ‘여성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 확대’가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154억 4천 8백 만원이 투입된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이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별 세부사업의 성과목표달성 현황과 연구자의 점검 의견 그리고 관련된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다음 <표 3-22>와 같다.

〈표 3-22〉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취약계층 복지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지적 운영	15,448	지원인원	4,994	4,5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을 통한 성평등한 개선 효과는 미미함. 예산과 인력 등 추진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편임. • “성인지적 운영”에 대한 점검이 보다 상세히 요구됨. 여성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한 자활사업이어야 성인지적.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도 필요함. • 빈곤여성에 대한 일시적 지원은 가능함. 그러나, 장기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중앙정부사업이지만 지자체의 특성을 발휘할 별도 예산 혹은 추진이 가능한 지 점검 필요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3,589	서비스 인원	10,863	1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시대라 사업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나, 성평등확산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독거 자체가 수혜자격이라기 보다는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자체를 점검해야 함. 빈곤한 부부노인가구에서 여성이 남성을 돌보는 경우 많은데, 지원책이 더 필요할 수 있음.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강화	179	목표인원	56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및 가족 교육, 대상자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 체감이 낮음. 경제적 역량강화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고 판단함. 여성장애인이 모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필요하며, 남성배우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확대	5	프로그램 수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고 판단함. • 행사에 그치는 사업들보다는 취업과 생계유지 등 정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데 집중할 필요 있음.
한부모 복지 급여 확대	3,376	지원인원	4,420	12,4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기금(현 양성평등 기금)사업으로 적절하지 검토 필요. • 양육비지원의 현실화 요구가 큼. • 남성 한부모가정의 문제도 점차 고려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과 추진체계에 대한 만족도 낮음. • 수혜자 인원이 계획에 비해 대폭 늘었는데, 예산 확보는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함. • 여성과 남성 한부모의 요구가 다를텐데 확실적 지원에 머물고 있음. • 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 있음.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409	지원인원	2,000	3,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양육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재가한부모지원 사업은 성평등 확산에 꼭 필요한 사업임. • 상담이나 자조모임 등은 생계로 바쁜 한부모에게 부적절하기도 함. 생활양식에 맞는 프로그램 필요함. • 특히 여성 한부모에게 정서적 지지와 자존감 향상이 중요함.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96	지원세대	61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예방은 성년 여성의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음. 이런 점에 초점을 둔 것 바람직함. • 지원 대상 발굴이 과제인데, 타 청소년 프로그램(집밖청소년 등)과의 연계 강화가 요구됨. • 필요성에 비해 지원이 미미하고, 만족도가 떨어짐.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육아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 중단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집중 노력이 요구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확충	350	임주세대	29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은 가장 시급한 사안임.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이 요구됨. • 모자가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부자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역시 절실함.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사회의 수용성 제고	8	참여인원	13,393	13,9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원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본 사업이 성평등 확산이나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수용에 기여하는지는 의문임. • 정착지원사업에 통합해 운영하거나, 행사를 지양하고 지역사회활동에 동참하게 하는 등 다른 방안이 요구됨. •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다문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체계화	237	사레관리 센터운영	25 5	2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사업 추진임. •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목적으로 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적응 교육 등은 지양해야 함.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등은 장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과 추진실적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음. 그러나, 성평등한 기대효과에는 낮은 편임. • 일률적인 한글교육 등은 지양해야 함. • 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 지역사회활동 촉진이 요구됨.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성이 요구됨.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174	교육인원 참여가정 수	760 132	822 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계획이 필요함. • 교사와 기관종사자 등 다문화가족 자녀와 주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3) 돌봄과 건강 사업

‘돌봄과 건강’ 영역 중 2015년에 가장 많은 예산인 2,362억 1백 만원이 투입된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업이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방과후 돌봄 서비스 체계화’ 등 아동을 돌보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하기 위한 사업에도 47억 7천 4백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시행됐다.

개별 세부사업의 성과목표달성 현황과 연구자의 점검 의견 그리고 관련된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다음 <표 3-23>과 같다.

<표 3-23>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돌봄과 건강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4,774	확충개소 수	1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의미 큼. 가정어린이집 의존도가 높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태 감안 필요함. 공공형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실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함.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개소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수요대응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함. 공공형 어린이집으로는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 국공립어린이집 수의 증가는 여전히 필요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항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357	확충실적 수	460	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성평등 확산의 측면에서 의의 큼. 그러나, 사업 허파 및 만족도는 낮음. 취약계층 어린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전문교사가 필요한 시점임.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236,201	지원액 시설수	75,000 1,048	75,615 1,2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과정, 예산,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임. 가정형어린이집 의존도 높은 대전시의 경우, 민간소 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약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 시점임.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0,143	지원실적 (인원)	47,930 47,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품질 향상은 고객 만족, 즉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 지속적인 투자와 교직원 품 질 관리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과정, 예산,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임. 교직원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어야 함. 국가적 지원의 문제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10	계획대비 이용율	100 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 목적이 여성의 삶의 질 개선, 성평등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확산이 요구됨. 센터가 앞으로 보육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전개할 사업이 많을 것으로 기대함. 예산 확보를 통해 시간제보육, 병아보육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 기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함. 그러나 사업추진과정, 예산,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부정적임. 타시·도 대비 시비 투입이 현저히 낮음. 체계적인 보육정보제공, 시민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확대·강화가 요구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항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3,463	연계건수	70,125	110,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육아 등 양육부담경감에 도움이 큰 사업임. •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종류에 대한 다양화와 연계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11,194	지원센터수 등록청소년 수	147 190	147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필요함 시점임. • 지역아동센터는 양질의 교사 확보의 어려움이, 방과 후 학교는 교육 품질 제고에 대한 강한 요구 있음.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828	설치 수 이용아동	38 62	38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시·도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이 대덕특구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음. •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원체계의 다양화 모색이 필요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526	지원가정	139	1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이 주로 장애아를 돌보는 여성에게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성평등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복지 사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나 사회복지서비스업 등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고려와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함.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자녀 연령이 대상 기준이 될 필요는 없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40	이용건수	7,000	8,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눔터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필요성, 성평등 확산 효과 등은 클 것으로 기대함. 현재 운영 개소 수를 대폭 확대할 필요 있음.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자격관리 강화 및 처우개선	비예산	인원	3,000	3,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보조인 등 돌봄노동자 대상 교육이 성평등 확산 및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인력의 진문화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함. 여성이 돌봄노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여성정책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는 않음.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비예산	참여자수	1,000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에 의한 자발적 참여자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나, 성별 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확대 방안 강구 필요함. • 남성의 가사육아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운영 만족도 및 개선안 모색 절차 필요함. • 공무원에 한정된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음. • 요구 증가하고 있는 사업임.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108	인력지원	1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차원에서 성평등 확산 목적에 크게 부합함. • 대체인력 지원 인원 계획이 10명이 불과했다는 점은 수요를 생각할 때 부족함. • 대상자가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큼. •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준공공기관으로의 확대를 기대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항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비예산	출산휴가 승인율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가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 성평등확산에 열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임. 남성육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아버지 대상 교육 활성화를 제안함.
아버지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교육 활성화	3	참여인원	450	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상담 등 대규모 강연 방식을 줄일 필요 있음. 1인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성평등 확산 기대효과는 있음.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만혼 및 평생비혼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가족친화환경 조성 노력 확산	40	과제 수	6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개선 등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본 사업이 어떠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했는지 제시 필요함. 건강가정기본계획 사업 모두가 해당된다는 보고서는 큰 의미 없음. 건강가정기본계획 사업과 차별화된 특정 목적을 가진 사업 발굴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과정 및 효과에 대한 기대가 미미함. 사업 내용이 추상적이지 않은지, 특정 주제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필요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	3	참여인원	1,520	14,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삶의 질 개선과 성평등 확산이라는 본 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보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확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임.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1,581	지원인원	2,533	2,5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음. 산모와 도우미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예산과 추진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전후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성 있음.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 있음.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항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비예산	지도점검 수	1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산후조리를 지원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있었으나, 구체적 지원 추진은 미미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4	의료비지원 수	37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 관리와 청소녀의 학업 권 보장 등을 위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 방안 강화가 요구됨.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44	지원인원	115	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확산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사업인지 검토 필요함. •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운영 시 타 복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점검이 요구됨.

3)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

‘성평등 의식과 문화’ 영역 중 2015년에 가장 많은 예산인 2억 1천 만원이 투입된 사업은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사업이며, 총 10개의 사업 중 5개가 비예산 사업이다.

개별 세부사업의 성과목표달성 현황과 연구자의 점검 의견 그리고 관련된 기관·단체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다음 <표 3-24>와 같다.

〈표 3-24〉 성평등 의식·문화 사업 추진실적 점검표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비예산	여성비율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비예산인 점은 충실성에 연간 여성 보직 현황 및 고위직 비율 변화 추이를 점검하고 공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의 점진적 향상이 가시적이지 않음. 주요부서(예산, 기획 등)에 여성 배치, 역량 강화 컨테츠 개발 필요함. 남성 고위공직자 대상 성인지력 향상 교육 필요함.
		여성위촉율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확산 기대효과 큰 사업임. 여성 진출 저조한 영역의 인재풀 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늘여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다양한 여성 위원 발굴해야 함. 복지 외 도시계획, 경제산업, 건설 등 영역 위원회 여성비율 제고 여전히 필요함.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비예산	여성위촉율	38.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확산 기대효과 큰 사업임. 여성 진출 저조한 영역의 인재풀 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늘여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다양한 여성 위원 발굴해야 함. 복지 외 도시계획, 경제산업, 건설 등 영역 위원회 여성비율 제고 여전히 필요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76	성별권실링 성인지컨설팅	800 375	782 4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점검 모니터링이 필요함. 별도 예산 투입을 통한 진담인력 강화 사례 참조해야 함.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53	강좌횟수 회의횟수	3 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확산 기대효과 큰 사업임. 여성 위원의 52.9% 확보는 합목적성 달성 방안으로 적절함.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연구회 추진 실적이 미흡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2015년 실적		
성인지통계 생산·점검체계 구축	비예산	통계발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통계를 활용해 정책 결정 과정과 과정에 영향을 미쳐야 함. 대전시 사회조사 결과, 그 외 성인지 통계 활용 현황 조사 필요함. 예)성별영향분석평가 상 통계 활용 실태 점검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생산과 활용은 필요함. 성인지 통계 생산을 통해 발굴되는 이슈(1인 가구, 고령화 등)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음.
성인지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7	보고서발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목적성과 충실성을 확보함. 전문 정보와 홍보용 정보를 생산으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발간 필요함. 실질적 수혜자 확보, 수혜율 증가 등에 대한 모색 필요함.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	비예산	정원의13%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확산 기대효과 큰 사이나 비예산인 점은 개선해야 함.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합목적성과 충실성 제고를 위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성 큼. 이를 위한 계획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현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여성정책책임관,여성정책협조부서 등 정책 총괄·조정 체계 정비	비예산	체계정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사업 제목과 내용이 어떠한 목적과 추진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호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본 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주류화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체제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정책 추진 지원 업무가 요청 됨.
국가 및 지역성평등 지수 활용도 제고	42	발간횟수 보고서발간	1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성평등 지수’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의견 수렴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업무를 넘어서는 영역이 성평등지수 지표로 있는 것보다는, 자체 점검 가능한 지표 개발이 요구 됨. 지수가 낮은 분야에 대해 (성 주류화 제도를 활용한) 정책 추진 과정의 변화를 파악하게 시도해야 함.

세부사업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의 합목적성 /충실성	협장 전문가 의견
		성과지표	2015년 계획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210	여친도시 지정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계획, 사업 추진 과정, 특화 사업에 대한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작동이 필요함. • 기초자치구로의 여성친화 도시 확산에 기여한 바 있고, 사업 추진의 충실성이 인정됨. • 서포터즈단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요구됨.

제3절 정책과제 추진 성과 분석 시사점

2013년~2015년까지의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과 2016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을 다양한 분류 근거를 통해 분류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제정은 기존의 여성정책이 가지고 있었던 ‘성평등 확산’ 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비전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시혜적 복지 사업을 분리해내고, 성 주류화 제도 등 실질적 성평등 확산의 전략을 이끈 효과가 있다.

둘째,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정책이 여성과 관련한 것은 사실이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전체 사업의 70%를 상회하고 있고, 시정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사업이 1개에 불과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보다 다양한 실과에서 다양한 영역과 주제의 양성평등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획조정실의 주요 사업들이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중 상대적으로 점수가 떨어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과 ‘안전’ 분야 관련한 사업들이 확장, 강화됐다. 그러나 크게 떨어지는 ‘가족관계 만족도’ 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들은, 돌봄 예산이 증액된 데 반해, 확장, 강화되지 못했다.

넷째, 최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내용과 예산 면에서 확장, 증가했다.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30대 여성들은 육아로 인해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까지 이어지는 4,50대 여성들은 조직적응력에 약점을 보인다. 세대별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일자리와 안전 등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두 영역에 있어서는 상시 이 영역의 사업 방향과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이 요구된다.

여섯째, 일회성 사업, 홍보용 사업 등은 정리하고, 성인지적 사업 계획 수립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이나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 등은 성별 특성과 차이가 보다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업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한 예산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증액되고 확대되었으나,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부족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개소에 불과하고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성 주류화 제도 관련한 교육과 사업이 확장되고 종류도 많아졌으나, 사업 추진의 전문화를 위한 예산 투입과 성 주류화 제도 간 연계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제 4 장

2017년 대전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제안

제1절 2017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제2절 2017년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목표

제3절 2017년 시행계획 세부과제 수정 및 보완 제안

제4장 2017년 대전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제안

제1절 2017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

1. 목적

2017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은 ‘구조화된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책 여건과 계획 수립 배경

2017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정책 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한다.

□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의 약화

-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전지역 여성의 경제활동감가율은 2015년 기준 51.6%로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나, 전국 평균인 51.8%보다 다소 낮다.

- 취업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 비율이 취업 여성의 1/4 수준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의 남성 참여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 인구 구조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1인 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특징이 나

타나고 있다. 대전지역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1/3에 다다르며, 이들의 주거와 건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여성 가구주 가구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가구 중 30%가 여성 가구주 가구로, 특히 저소득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정책 수요를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여성 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강간과 강제 추행 등 성범죄 발생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전시 전반적으로 성폭력 위험도는 낮으나 특정 지역은 높은 성폭력 등 성범죄 위험도를 보이고 있다.

- 범죄 위험에 대해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그 심각성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 영역 중 안전 영역이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 다소 뒤처지고 있다.

□ 여성의 대표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남성의 1/3수준이며, 특정 업종에 여성 쏠림 현상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 정책 결정 및 추진의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을 40%가까이 끌어올렸으나, 주요 보직과 실·과의 여성 공무원 비율,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필요성 대두

- 지역사회에서의 성평등 현황에 대해 여성은 남성보다 덜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가족관계만족도(2015년)에 있어 여성의 만족도(3.68)가 남성(3.72)에 비해 떨어지는 점과,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가 2015년에 105.2로 자연 성비를 회복했으나,

2014년에 120.5로 매우 불균형했던 점을 생각하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에 대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2017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수립 배경에 근거하여 수립한다.

□ 양성평등 개념의 적용과 확산

- 양성평등기본법(제3조)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양성평등이라 정의하고 있다.

-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책임, 기회보장, 처우 등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것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별 자체가 혹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구조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삶을 제약하지 않아야 함을 본 계획은 기본적으로 지향하며 이러한 개념을 적용한 사업을 추진한다.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에 근거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에 나타난 정책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

- 양성평등정책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남성의 참여와 통합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여성정책과 차이가 있다.

3. 추진 근거

본 시행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와 제8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근거한다.

제2절 2017년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비전과 목표

본 시행계획은 여성가족부의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되, 대전지역의 특성과 여성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정책과제 수립을 제안한다. 2016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상 제시되었던 대과제는 여성가족부의 것을 그대로 활용하되, 중과제는 과제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12개로 줄였다. 12개의 중과는 기존 내용을 유지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진결과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소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림 4-1] 2017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3절 2017년 시행계획 세부과제 수정 및 보완 제안

이 장에서는 2013~2016년 사이 추진된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정책 사업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의견과 사업 내용의 합목적성 및 충실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시행계획에 반영 여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4-1>은 201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사업 중 수정이 필요한 사업들과 수정 제안 내용이다.

<표 4-1> 2016년 양성평등정책 수정·보완 필요 사업

중과제	사업명	수정·보완 내용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 실적 점검 대상 기관의 확대 - 시·구청에서 출연·출자기관, 공공부문에 속하는 기관(시설)까지 확대 점검하여 실적 점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	- 일회성 사업이므로 삭제 - 출연·출자기관, 공공부문에 속하는 기관(시설)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추진 현황 점검으로 수정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사업 추진의 실효성 재검토 필요 -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으로의 편입 검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강화	- 실적 점검 대상 기관의 확대 - 다양한 기관 및 대상에 따른 교육 추진 실적 점검 필요
성폭력·가정 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안전망 강화	- 여성안전을 위한 거버넌스 정기적 운영 필요 -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기존의 세부사업들 중 상당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몇몇 사업은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거나 현 시대 흐름에 맞게 내용이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에 필요한 신규 편입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2017년 시행계획의 주요 신규 세부과제 제안

대과제	중과제	사업명	사업 내용
양성평등 문화 확산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시민과 함께 하는 성평등 교육	- 성평등 교육 전문가 인력뱅크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용 격차 해소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발굴과 지원 강화	- 기존 사업의 확대와 강화(예산 증액)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강화	- 동, 중, 대덕구에 부족한 여성새일센터 확충 방안 제시 필요 - 지소 설치 등 인력 보강에 따른 취약 지역 지원 강화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안전한 사회문화 환경조성	안전문화운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한 포럼의 정례화 -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와의 연계 추진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 인력의 전문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에 대한 보상, 교육훈련 강화, 업무 분리를 통한 전문성 확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연계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이행점검과 환류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및 결과 공유, 홍보

최종적으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과제 총괄표를 변경하여 제안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2017년 시행계획 과제 총괄표 변경안

대과제	중과제	세부사업명
양성평등 문화 확산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	시민과 함께 하는 성평등 교육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강화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일·가정 양립 확산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활성화
		아버지학교, 아버지교육 등 활성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강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확대
	돌봄의 다양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국공립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제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확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강화

대과제	중과제	세부사업명
고용 격차 해소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직업훈련 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 강화
		여성기업 지원 및 경영인프라 확충
		여성친화기업 확대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발굴과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강화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여성 근로자 경력개발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단절 예방 및 역량강화 지원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 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성폭력 피해자 특성별 지원서비스 확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의 실효성 제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자립 지원
		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통한 민·관협의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안전망 강화
	안전한 사회문화 환경조성	폭력피해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안전문화운동 포럼 및 세미나 개최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기반강화	

대과제	중과제	세부사업명
건강과 복지 증진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확대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역량 강화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 강화
		여성친화도시 확산
		양성평등 정책담당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고위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교육 및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 강화	양성평등정책 추진 인력의 전문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효과 제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제도의 연계 강화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이행점검과 환류

참 고 문 헌

- 구미현·김경희·허성우(2015), 대전시 여성정책의 집약·결정·집행과정 진단과 발전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김양희·박기남·류연규·장명선·우현주(2009),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연구, 여성부.
- 김태홍·장혜경·황정임·배호중(2012), 최근 10년간 여성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순덕·현혜경(2012),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 평가 및 보완 계획, 제주발전연구원.
- 민무숙·양인숙·윤덕경·황정임·마경희·김양희·최윤정(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지혜·이미원(2013), 대구광역시 여성정책 이행점검 연구, (재)대구여성가족재단.
- 여성가족부(2013),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여성가족부(2015), 2015~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 여성가족부(2016), 2015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 이수연·황정임·마경희·김난주(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은아·박재규·최성일·박지혜·백경재(2008), 경기도 여성발전 5개년 계획 이행점검 및 향후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임우연·안수영(2012), 지방자치 20년 충청남도 여성정책의 변화와 과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주재선·김원홍·김난주·손현민(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혜진·박노동·윤경아·임정규·정연정·조학래·최종인·김은하(2011), 대전여성발전의 비전과 전략,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1. 설문지

1. 2015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현장 전문가 평가 및 의견 조사 설문지

- 일자리 부문

2015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현장 전문가 평가 및 의견 조사 - 일자리

- ▶ 세부사업별로 이 사업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점수를 주십시오. (√표를 번호에 하시거나, 해당하는 번호만 남겨주세요.)
- ▶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 ▶ 세부 사업별로 덧붙일 의견을 말씀해주시요. 이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효과 등의 면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 ▶ 세부사업별 내용은 이어서 나오는 부록을 참고해주세요.

2016년 9월

■연구책임 : 주혜진 책임연구위원(대전발전재단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042-530-8522)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임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50	이용자 (명)	2,550	2,55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지원	70	수혜자 (명)	8,690	11,025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력단절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운영	1,782	구직등록수 (명)	12,815	13,495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중·장년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1,791	훈련참여자 (명)	310	327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22,994	참여자수 (명)	8,650	11,193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134	지원실적 (명)	37	35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39	채용인원	0	3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7	참여인원	400	566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66	참여인원	208	252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임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82	수혜인원	72	72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10	설립수	20	22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여성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462	참여자	126	126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개선	1,782	참여자	26,548	20,426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7,000	지원업체 구매율	100 8%	190 10.98%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업별 내용- 일자리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적인 취업 현실, 경력단절 문제 등 여성이 갖는 취업의 구조적 장애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학 공모·신청, 멘토의식 강화, 커리어코칭 등 청년여성의 커리어 개발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단절 예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실시 ○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관련 직종의 취업정보 제공 ○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 및 소그룹의 활동 지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경력단절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대 여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전공능력강화 지원 ○ 우수 여학생 이공계 진학 유도를 위한 전공체험 및 진로멘토링 지원
중·장년여성 직업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화 되어가는 취업시장 적응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여성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용 ○ 경력단절 기간을 메워줄 교육훈련을 통한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상담 기간을 거쳐 희망직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 - 취업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취업기회 제공 및 동기를 부여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우선직종 창출을 통해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취업·창업활동,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편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 제고 ○ 꿈나무 자금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호, 유해환경 지도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으로 노인소득 창출 ○ 시니어클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적합형 사회활동지원 수행전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수당 지급 ○ 노인 일자리경진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취업알선, 경진대회를 통해 일자리 수행기간 정보 제공과 상호교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특기·적성교실 강사지원으로 아동의 재능개발 및 시교육비 절감 및 관내 거주하는 지역의 전문여성인력을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아실현 계기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30주 (상반기 15주, 하반기 15주) - 교육대상 : 관내 초등학교 - 교육인원 : 과목별 20인 이상 - 수 강 료 : 무료 (교재비, 재료비 본인부담)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사 : 공개모집 - 강 사 료 : 구청에서 지원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파악 등 종합적 판단 후 단계별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민 행정서비스 효과 최대화 사업 선정 추진 -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및 근무성적평가 후 전환 실시 -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직원(여성)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013. 1. ~ 2015.12. / 총 30명 ○ 무기계약직 전환업무에 대한 직무분석 및 인력적정성 평가 전환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례관리 사업 등 27명 채용(여성 24명)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상담사 등 3명 채용(여성 3명)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향토음식 최고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여, 향토음식문화 확산 및 지역 경제 활성화교육 실시 ○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소비자와 함께하는 도·농교류 사업 수행 ○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형별, 단계별 교육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이민 여성 인력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 인턴으로 알선 ○ 결혼 이민 여성 인턴 채용시 채용기업에 월 60만원씩 5개월 지원 ○ 다문화 보조강사 양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 업무 및 교육실습 등 보조도우미 배치 - 기존 다문화 강사의 사업수행시 업무보조를 통한 현장실습 등 기회 제공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1월~12월) - 초기상담, 집단상담, 재상담을 통한 욕구 및 문제해결 진단, 생애주기별 다양한 고충상담 지원 ○ 정보제공(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등 통합정보제공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활용, 리플렛 제작·배포, 소식지 발행·배포하여 여성장애인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 ○ 사례관리(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서비스계획수립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관련계 등 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점검 및 종결평가 후 서비스 지원에 따른 변화 등을 평가 ○ 역량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안정 및 가족친화 영역 : 푸드아트테라피, 꿈지락교실, 문화체험 - 사회·문화·여가활동 : 인형극단 운영, 우쿨렐레 교육반 - 경제활동(창업교육반 운영) : 캘리그라피, 초크아트 ○ 지역사회연계서비스(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기관의 네트워킹 구성 및 협약체결을 통한 서비스 교류 및 연계 ○ 자조모임(지역사회봉사/ 3월~12월 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장애아동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오카리나, 마술, 네일아트 등) ○ 보육 및 노인 돌봄서비스 관련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연중 - 대상 : 부모보육협동조합 희망자, 요양보호사, 노인돌봄서비스제공자 등 - 내용 : 협동조합 이해, 설립절차, 유형, 등기절차, 장단점 등 ○ 여성 일자리를 위한 협동조합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분기별 교육 - 대상 : 중·장년층 여성, 소상공인 창업희망자 등 - 내용 : 협동조합 설립절차, 유형, 등기, 경영, 세무, 회계 등 교육 - 사업유형 : 돌봄서비스, 밑반찬, 도시락 제조, 소상공인 창업 등
여성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사업 : 폐현수막 자원재활용 녹색사업 등 5개 사업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근로사업 : 전통시장 주정차관리요원 등 5개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준에 따른 저임금가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별도 취업프로그램 도입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공동일자리 제공,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공공 일자리 우선 제공 등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안정자금 2억원 이내, 이차보전 3.0%(일반기업 2.0%)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13억원 이내, 이차보전 2.0%(일반기업 1.0%) 지원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 공사(3%), 용역·물품(5%)

2. 2015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현장 전문가 평가 및 의견 조사 설문지

- 성폭력 예방 부문

2015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현장 전문가 평가 및 의견 조사 - 성폭력 예방

- ▶ 세부사업별로 이 사업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점수를 주십시오. (√표는 번호에 하시거나, 해당하는 번호만 남겨주세요.)
- ▶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 ▶ 세부 사업별로 덧붙일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효과 등의 면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 ▶ 세부사업별 내용은 이어서 나오는 부록을 참고해주세요.

2016년 9월

■연구책임 : 주혜진 책임연구위원(대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소, 042-530-3522)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① ② ③ ④ 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① ② ③ ④ ⑤	덧붙일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성폭력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796	지원인원 참여자수	425 250	275 187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일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394	상담인원 주거지원수	12,000 25	13,380 2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1,029	상담건수	1,700	1,863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1,030	임소자 참여인원	10 10	9 17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불법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단속 강화	비예산	점검횟수	2	2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51	지원인원	2,960	2,96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69	제작학교	30	30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32	지원 지역 이동센터수	7	9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법,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등 방지 내실화	8	교육횟수 캠페인횟수	2 2	2 2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업별 내용- 성폭력 예방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성폭력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적 진단평가와 정서·심리치료 기능이 강화 된 『대전해바라기센터』 운영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자 및 보호자 의료비 지원 : 83,607천원 * 대전해바라기센터,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53,714천원 * 늘해링(장애인), 나눔봄 쉼터(19미만아동), 대전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없는 특수전화「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소에 연계가 곤란한 야간·휴일 등 특정 시간에는 1차 긴급상담 후 익일 오전 전문상담소에 연계 조치 - 폭력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위기개입이나 상담활동,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9, 112등의 연계조치,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상담원 상시 대기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현장출동 위기개입 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적극 연계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 공동생활가정 12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 입주 공동생활 - 임대보증금 및 입주준비금 운영기관이 부담 * 입주자 본인 부담금 호당 700천원 범위내에서 결정 /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 입주자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비(월임대료)는 통상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수준 - 자활도우미 배치 입주자의 자활지원 및 입주자 관리 * 상담원 자격소지자 1인 배치 *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지원 등
성매매피해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를 통한 조기개입으로 탈성매매 지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강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 등에 개별화·특성화를 통한 전문상담, 의료 및 법률문제 지원, 사회보장 급여수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 3개소 -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사업 : 2개소 ○ 탈업소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직업재활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과 공동 작업장 등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학교진학 및 교육관련 지원 ○ 자립자활 교육·기술교육 및 취업정보제공 ○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회복 지원
불법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영엄정지 및 등록취소 등 조치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입소자 치료, 회복 위한 프로그램 및 의료, 법률, 출입국관리비용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계획 추진 ○ 지역연대 기관의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사례개입 및 사례관리 ○ 여성·아동안전 예방 홍보 및 범시민 캠페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관 및 시설에 예방교육 및 홍보 진행 ○ 위기사항 24시간 대응 및 긴급구조 지원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 : 1366, One-stop운영 -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 실무협의회 공동대응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로 부터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개선 등 안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업의 유형 : 안전진단, 안전귀가, 환경개선 등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기연,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등 방지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방지 및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 통합 교육 / 년4시간 집합교육 - 신규채용 및 집합교육(인재개발원) 등 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처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 상담창구 설치 운영 -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 실시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7명 (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연 직 : 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관, 총무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위촉위원 : 2명 직원대표(공무원노동조합 추천) * 간사 :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복지담당 ○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 등) 및 자치구 추진실적 확인

3. 2015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현장 전문가 평가 및 의견 조사 설문지

- 취약계층 복지 부문

2015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현장 전문가 평가 및 의견 조사 - 취약계층

- ▶ 세부사업별로 이 사업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점수를 주십시오. (V표를 번호에 하시거나, 해당하는 번호만 남겨주세요.)
- ▶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 ▶ 세부 사업별로 덧붙일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효과 등의 면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 ▶ 세부사업별 내용은 이어서 나오는 부록을 참고해주세요.

2016년 9월

■연구책임 : 주혜진 책임연구원(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042-530-3522)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황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일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15,448	지원인원	4,994	4,565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임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3,589	서비스인원	10,863	11,080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강화	179	목표인원	56	56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확대	5	프로그램수	4	5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한부모 복지 급여 확대	3,376	지원인원	4,420	12,452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제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409	지원인원	2,000	3,944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확대	96	지원세대	61	60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확충	350	입주세대	29	4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사회의 수용성 제고	8	참여인원	13,393	13,968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일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 체계화	237	사례관리 센터운영	25 5	25 5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174	교육인원 참여가정수	760 132	822 18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업별 내용- 취약계층 복지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시장진입형, ②인턴·도우미형, ③사회서비스형, ④근로유지형 ○ 자활근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시장진입형, ②인턴·도우미형, ③사회서비스형, ④근로유지형 ○ 자활기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사업, 외식업, 청소, 화훼사업 등 ○ 희망리본 및 취업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자활역량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자를 통한 탈빈곤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추진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활촉진을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능력 자에게 자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 ○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사업 -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산형성지원으로 자립·자활을 통한 탈수급 촉진
<p>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주거·건강·사회적 접촉수준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안전확인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p>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의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및 홍보사업
<p>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등 지원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간담회 실시 / 분기별 - 가족아와나들이 / 연 1회 - 북한음식나누기 / 연 1회 - 북한이탈주민 김장김치지원 / 연 1회 ○ 여성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업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상담실 운영 및 각종 사회보장지원·취업정보 등 제공 / 연중
<p>한부모 복지 급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비 지원 : 인당/월 10만원(만12세미만 아동) ○ 추가 양육비 지원 : 인당/월 5만원(만5세이하 아동) ○ 고등학교자녀 학비지원 : 인당/입학금,수업료 ○ 초·중·고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인당 / 연1회 / 5만원 ○ 월동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 22만원 ○ 자녀생활교육비 지원 : 1인당 12만원 / 연1회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p>제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고용지원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 한부모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집단 상담을 통한 일상정보 제공 및 포레 집단 형성 ○ 자조모임을 통한 자존감 향상과 정서지원 제공
<p>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단절이 되지 않도록 양육비 지원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당 월 100,000원씩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 고등학교이하의 학업 중단 청소년한부모에게 역량개발 기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별 연154만원 한도 내 지원(학원등록비+교재비 등)
<p>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호시설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기본생활지원 : ○ 미혼모자가족공동생활지원 :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미혼모자가족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 저소득 무주택 미혼모자가족
<p>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사회의 수용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교육(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등), 배우자·부부교육 (부부관계향상 교육 등), 부모자녀교육(자극심향상, 부모교육 역할 등) - 다문화이해교육(한국사회적응, 소비자경제교육 등), 가정 내 성역할과 평등 교육 ○ 일선공무원에 대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개설 및 교과목 편성 운영 ○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 시민 - 내 용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자 표창, 세계 각국의 문화 공연 및 체험 행사, 노래자랑 등
<p>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p>체계화</p>	<p>-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 다양한 정보제공 및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추진</p> <p>○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코디네이터) 사업 추진 -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 능력, 자녀 유무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p> <p>○ 다문화가족전담 민원상담 창구 운영 - 전담인력을 배치 고충상담을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 안내, 정보 제공 및 관련기관 연계 지원</p> <p>○ 다문화가족 대표자회 구성·운영 - 출신국가별 대표자회를 통하여 고충·욕구사항 수렴,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정책 기초자료 확보</p>
<p>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p>	<p>○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 한국어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정서적 안정감 및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지원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p>

4. 2015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현장 전문가 평가 및 의견 조사 설문지

- 돌봄과 건강 부문

2015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현장 전문가 평가 및 의견 조사 - 돌봄과 건강

- ▶ 세부사업별로 이 사업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점수를 주십시오. (V표를 번호에 하시거나, 해당하는 번호만 남겨주세요.)
- ▶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 ▶ 세부사업별로 덧붙일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효과 등의 면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 ▶ 세부사업별 내용은 이어서 나오는 부록을 참고해주세요.

2016년 9월

■연구책임 : 주혜진 책임연구위원(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042-530-3522)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일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4,774	확충개소수	17	18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일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357	확충실적수	460	460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236,201	지원액 시설수	75,000 1,048	75,615 1,20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0,143	지원실적 (인원)	47,930	47,930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10	계획대비 이용율	100	255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3,463	연계건수	70,125	110,104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11,194	지원센터수 등록청소년수	147 190	147 180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828	설치수 이용아동	38 62	38 55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526	지원가정	139	139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일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40	이용건수	7,000	8,550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자격관리 강화 및 처우개선	비예산	인원	3,000	3,17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비예산	참여지수	1,000	1,015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108	인력지원	10	25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비예산	출산휴가 승인율	100	100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아버지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교육 활성화	3	참여인원	450	580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가족친화환경 조성 노력 확산	40	과제수	60	60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	3	참여인원	1,520	14,927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일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1,581	지원인원	2,533	2,559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비예산	지도점검수	19	19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44	의료비지원수	37	4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44	지원인원	115	122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업별 내용- 들봄과 건강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의 연차적 설치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예산확보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로 국공립과 민간시설과의 보육분담(이용아동수 기준)완화 ○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기능을 국공립 수준으로 기능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주력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 맞춤형 특수(취약)어린이집 확충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p>정비 및 실효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등 취약어린이집 확충 - 맞춤형가구, 다문화가정, 장애아가정 영유아를 위한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한 다양한 계층에게 보육기회 제공 ○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최소화 -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최소화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임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p>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지원 - 보육료 확대지원 : 만0~2세 무상보육 및 3~5세 누리과정을 통한 순계층 무상보육·교육 확대실시 - 가정양육수당 확대지원 : 만 5세까지 연령별 10 ~ 20만원 지원 ○ 구공립 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충 -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공성 확보 ○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5개소(자치구별 1개소), 보육아동 부모 및 보육전문가로 구성 -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보육환경 모니터링·컨설팅
<p>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 영아반, 장애아전담·통합시설 특수교사·치료사, 시간연장형, 방과후 보육교사 등 특수어린이집 근무자 특별수당 지급 ○ 영유아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법정 보육교직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법정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통급식비 지급 ○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 동일 시설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 지급 ○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 당해연도 3월1일부터 수당지급일(5월) 현재 동일시설에서 종사하는 근무자(원장 포함)에 대하여 연 1회 지급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수당으로 원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지급 ○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 직장어린이집 종사자를 제외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월 5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보육교직원에 지급
<p>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장애아, 다문화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육아지원 ○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양육상담, 놀이감 대여, 부모강좌, 놀이체험)
<p>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사 업 비 : 3,462백만원(국비2,424 시비1,038) ○ 사업내용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및 돌봄미 양성
<p>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 147개소, 4,115명 - 지원내역 : 운영보조금(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관리비) - 지원기준 :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급방법 :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른 계획서 검토 후 청구에 의거 매월 지급 ○ 사 업 명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운영장소 :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등 5개소 - 사업대상 : 9개반 190명(저소득가정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 운영시간 : 평일(월~토) / 14:00~19:00 (일요일 휴무) -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원 : 숙제·도서 지도 및 보충심화학습, 자기주도학습 * 전문체험활동 : 축구, 방송댄스, 뮤지컬, 수화, 핸드차임, 드림, 독서치료 등 * 자율체험 : 한자급수, 텃밭가꾸기, 통기타교실 * 생활지원 : 급식,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p>* 주말체험활동 : 책과 친구하기, 레포츠타일, 숲캠프, 스키캠프 등</p> <p>○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충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p> <p>○ 각종 지원을 통한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 유도 -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락세, 도시계획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면제 : 어린이집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교육기자재 -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 설치비, 운영비 무상지원 및 용자 : 고용노동부 - 운영비 무상지원 : 보건복지부, 자치단체</p>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p>○ 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의 가정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부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상담프로그램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p>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p>○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p> <p>○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 1개소 - 대 상 :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진 부모 - 시 간 : 09:00~18:00(월~금)</p>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p>돌봄인력에 대한 교육·자격관리 강화 및 처우개선</p>		<p>○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요구되는 활동보조인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이용장애인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명 :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 - 참여대상 : 성별 및 학력 제한없이 만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 - 교육내용 : 공통교육20시간, 전문교육2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론과 실기교육 - 교육기관 : 대전지역자활센터협회, 대전광역시 지적장애인협회서구지회 																																	
		<p>○ 유연근무제 유형</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세부형태</th> <th>개</th> <th>념</th> </tr> </thead> <tbody> <tr> <td>시간 선택제 근무</td> <td>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주당 15시간 ~ 25시간 근무, 근무시 1일 최소 3시간 이상)</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탄 력 근무제</td> <td>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간·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td> <td></td> <td></td> </tr> <tr> <td>○ 시차출퇴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 매일 같은 출근시간 또는 요일마다 다른 시간(07:00~10:00 선택) </td> <td></td> </tr> <tr> <td>○ 근무시간 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4 ~ 12시간 근무 / ▶ 주 5일 근무 </td> <td></td> </tr> <tr> <td>○ 집약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4 ~ 12시간 근무 / ▶ 주 3.5 ~ 4일 근무 </td> <td></td> </tr> <tr> <td></td> <td>○ 재량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td> <td></td> <td></td> </tr> <tr> <td>원 격 근무제</td> <td>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td> <td></td> <td></td> </tr> <tr> <td></td> <td>○ 재택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td> <td></td> <td></td> </tr> <tr> <td></td> <td>○ 스마트워크 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유형	세부형태	개	념	시간 선택제 근무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주당 15시간 ~ 25시간 근무, 근무시 1일 최소 3시간 이상)			탄 력 근무제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간·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시차출퇴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 매일 같은 출근시간 또는 요일마다 다른 시간(07:00~10:00 선택) 		○ 근무시간 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4 ~ 12시간 근무 / ▶ 주 5일 근무 		○ 집약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4 ~ 12시간 근무 / ▶ 주 3.5 ~ 4일 근무 			○ 재량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 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재택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스마트워크 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유형	세부형태	개	념																																
시간 선택제 근무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주당 15시간 ~ 25시간 근무, 근무시 1일 최소 3시간 이상)																																		
탄 력 근무제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간·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시차출퇴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 매일 같은 출근시간 또는 요일마다 다른 시간(07:00~10:00 선택) 																																		
	○ 근무시간 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4 ~ 12시간 근무 / ▶ 주 5일 근무 																																		
	○ 집약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4 ~ 12시간 근무 / ▶ 주 3.5 ~ 4일 근무 																																		
	○ 재량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 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 재택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 스마트워크 근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p>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p>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출산휴가·육아휴직 공무원 소속 부서 ○ 운영방법 : 기간제 근로자 활용, 실무수습 직원배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통한 업무 지원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자 지원제도 및 지원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3년,2008) 자녀연령 확대 (만6세→8세 이하, 2011) - 승진소요연수·경력평정기간·승급기간에 최초 1년간 산입 - 보수 미지급 (1년간 50~100만원 차등 수당, 월봉급액 40% 범위) - 별도정원 인정, 신규채용시 휴직인원의 30% 추가 채용 반영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제2항
아버지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단체·군부대 등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 및 부모교육 특강
가족친화환경 조성 노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교육·상담 및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공동체 의식 고취 ○ 부모와 자녀가 생각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제공 등
이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간 : 2015. 3. ~ 2015. 12. - 교육대상 : 관내 초·중·고교 어린이 및 청소년 - 교육장소 : 교육신청 초·중·고등학교 - 교육내용 : 식품구성탐 바로알기,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지침, 나트륨 섭취 줄이기, 올바른 간식 선택법 등 ○ 건강식생활실천 환경 조성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사 부재급식소 대상 식단 및 영양정보 제공, 건강식생활 실천 자료제공 및 홍보, 건강 체험관 운영 등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가정에 도우미의 표준서비스 제공 ○ 보건소 등록 임신부 산전·후 우울증 관련 교육·상담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 임신부 및 영유아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지도 점검 등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 섭취를 위한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위한 영양평가

5. 2015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현장 전문가 평가 및 의견 조사 설문지

- 성평등 의식 · 문화 부문

2015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전시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현장 전문가 평가 및 의견 조사 - 성평등 문화 확산

- ▶ 세부사업별로 이 사업 이행 현황에 대한 평가 점수를 주십시오. (√표를 번호에 하시거나, 해당하는 번호만 남겨주세요.)
- ▶ 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 ▶ 세부 사업별로 덧붙일 의견을 말씀해주시요. 이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효과 등의 면에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 ▶ 세부사업별 내용은 이어서 나오는 부록을 참고해주세요.

2016년 9월

■연구책임 : 주혜진 책임연구원(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042-530-8522)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일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 '15년 실적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비예산	여성비율	22.1	30.4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임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비예산	여성위축율	40	38.67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76	성별컨설팅 성인지컨설팅	800 375	782 436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53	강좌횟수 회의횟수	3 3	1 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성인지통계 생산-점검체계 구축	비예산	통계발간	1	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성인지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7	보고서발간	1	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	비예산	정원의13%	1,000	908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협조부서 등 정책 총괄·조정 체계정비	비예산	체계정비	완료	완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국가 및 지역성평등 지수 활용도 제고	42	발간횟수 보고서발간	16 2	16 2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세 부 사 업 명	2015년 예산 (백만원)	성과목표 달성도		이 사업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역 여성의 삶 혹은 성평등 현상이 개선되었다고 보는가?	덧붙임 의견 (사업별)
		성과지표	'15년 계획 '15년 실적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210	여친도시지정	2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업별 내용- 성평등 의식·문화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도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요부서 등 균등한 보직관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승진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부서 예) 기획, 예산, 인사, 총무, 감사, 실 국 주무과 등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여성참여현황 정기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기 : 년 2회 / 6월말, 12월말 기준 - 목 적 :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관리함으로써 부서장의 관심도 및 여성참여율 제고 - 조사내용 : 위원회 변동 및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 현황 ○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40% 달성 및 유지 ○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전문인력 참여를 확대하여 양성평등 이념 실현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정책개선실적보고서) 작성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발굴·홍보 - 분석평가 관련 지자체 현안사항 지원(분석평가서 작성 사례 개발 등)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전담인력 재위촉을 통한 운영 내실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분석 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교육 지원(교육청 포함) - 대상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 결과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 지역 양성평등 기반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양성평등기반 구축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 관련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예산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참여주민위원회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성인지 예산 포함) 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 방향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예산학교 (2015.3.25.) / 대전시민대학 주관 ○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방향, 성인지 예산 등 예산 편성에 대한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기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예산연구회 구성 및 제1회 실시(2015.12.8.) ○ 2016년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 설문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성인지 예산 등 예산 편성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성인지통계 생산-점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확대 ○ 성별분리통계의 점검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담당자 등 성별분리통계 건의 등
성인지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역별(인구, 보건, 복지, 교육, 교통, 환경 등) 성별구분 통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역통계와 연계하여,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함
성인지교육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력 향상교육(자체교육)

세 부 사 업 명	사업내용
<p>여성정책임관, 여성정책협조부서 등 정책 총괄·조정 체계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주관 시행 ○ 대전인재개발원 집합교육과정 분석평가 교육 반영(4시간) - 대전인재개발원에 신규과정 간부양성과정에 등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과목 신설 등 추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교육 참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조례규칙 개정반 등 ○ 과제담당 공무원 교육(시, 자치구 소속)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실무교육 ○ 전문가 컨설팅(대면, 서면 병행) 시행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성차별요인 분석, 정책개선 사항 발굴 지원 등
<p>국가 및 지역성평등 지수 활용도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성평등)정책 전담기구 설치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운영체계 간 연계 강화 ○ 성평등지표에 대한 지역 내 홍보 강화 ○ 지역성평등지수 활용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과제와 연계 - 지역성평등지수(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여성의 삶의 질 제고, 소외여성 사회통합)의 활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성평등 정책과제 연구개발
<p>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사업비 : 총 4.4억원(구 인센티브 4억, 서포터즈단 운영 4천만원) - '15년 210백만원, '16년 210백만원, '17년 10백만원, '18년 10백만원 ○ 주요내용 : 자치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 -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비전과 목표설정 등) -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및 서포터즈단(60명) 구성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 대전 대표사업 선정 및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지원 등

연구보고서 2016-25

대전시 양성평등정책 현황 및 효과 분석

발행인 유 재 일

발행일 2016년 10월 25일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갓 피플

TEL : 042-223-002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287-2)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jdi.re.kr

DJDI

ISBN : 979-11-85969-38-1 93330